

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라는 점이다. 더불어 인권학립은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복지국가론에서는 인권을 보장하는 장미빛 꿈이 떠돌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나 행정의 비대화에 대한 비판도 있다. 그리고 또한 전후 영국에서 나타난 공공주택정책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자치체가 공공주택을 관리운영하면서 보여준 권위주의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다는 점 등도 상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이제 "주택인권=국민거주권"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자.

4. 주택인권의 관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에 의한 경제활동이 노동시민의 생활을 능가하여 생존권까지도 위협하여 왔으며, 또한 공허문제 같은 것도 초래하였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비약적인 발전은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초래하여 거주환경이 열악하게 되었다.

그 위에 경제논리의 과잉추구는 결국 도시로부터 주택을 몰아내고 지구환경의 파괴로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경제활동이 지구환경, 국토, 지역 등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자 그대로 인간이 생존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자유주의를 우리는 것이 생존권적 기본권을 확립해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자유와 평등이 추상적으로 말해질 때, 그것은 약자를 제외하는 '자유'이거나, 누구의 통제도 없이 시장원리의 원가운데에서 경쟁하는 '생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나 '생동'을 느리거나 누리지 못하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현실에 대하여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주택인권은 결국 생존권적 기본권이 확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권 인권이라고 할 경우, 그것은 침해나 억압에 개입하는 인권(자유로서의 권리)과 최저보장으로서의 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택인권은 몇개의 구체적인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성, 피부색, 연령, 직업, 수입, 사상, 종교, 국적, 신체적 및 정신적 핸디캡 등)에 따른 거주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 사회 속에서 합의되는 최저수준을 채워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최저보장과 관련하여, 노숙자(Homelessness)의 문제에도 맞닥뜨리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노숙자는 여기서 말하는 최저보장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노숙자라고는 굳이 말할 수 없겠지만, 혼자 사는 노인이 누군가의 보호도 받지 않은 채 사망하여 오랜 기간 후에 발견되는 사례도 일본에서는 자주 보고되고 있다. 두 경우의 어느 것이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택인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주택인권은 전국민에게 '거주에 있어서 최저수준의 보장과 차별이나 침해의 금지'를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복지법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체의 행정에 따른 정책과 그것의 실행력에 크게 의존해 왔다. 사실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이 법으로 정해져 운용될 때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을 때이거나, 혹은 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이론과 실천이 수반되어 운동으로 전개될 때였다.

주택이런 것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거우기를 극복하는 것은 개인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일본의 이베올로기는 주택인권의 이념과 대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인권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에 기초한 법제도를 확립하고 운용해 나가려는 운동론적인 다짐을 요구한다.

이탈리아 주택인권사상과 주택운동

번역 : 김수현(토지주택연구부)

이 글은 早川和男 編著, 『住宅人權의 思想』 중 2장 2절, 宗田好史의 「英國의 住宅人權思想」을 번역한 것이다.

1. 이탈리아와 유럽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 이탈리아의 경제력이 급격히 발전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산업혁명과 공업화가 현종 발리 이루어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해 남부의 스페인, 이탈리아는 20세기 전반까지 유럽에서는 저개발국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북부의 공업국, 남부의 농업국으로 나뉘어, 남부 국가들은 농업 근대화에서 따른 이농인구를 쓴 노동력으로 북부에 공급해 왔다. 또한 남부 국가들은 사회 복지에 있어서도 북부에 비해 훨씬 뒤떨어졌었다.

그러나 1880년대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유럽의 남북구도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여러 경제시표에서 남부 국가, 특히 이탈리아가 북부의 국가들을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반드시 영국이나 독일의 발전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알프스를 경계로 북과 남으로 나뉜 유럽은 명사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근대화, 공업화에 있어서도 북과 남은 각각 조금 다른 발전을 겪어 왔다. 오늘날 이탈리아의 중요한 시민생활을 보면 알프스 이북과는 다른 인간중심

의 가치관이 보인다. 공업화 사회, 고도복지사회의 또 다른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이탈리아가 또 다른 발전 모델을 실현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탈공업화 시대에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이탈리아에 세계의 관심, 인기가 집중된 것은 이 나라가 실현한 발전모델이 「풍요로운 인간성」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복지주에 관해 매우 풍성한 문명을 이루었고 그것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이다.

건축분야에서는 이탈리아에 대해 이제까지 역사, 디자인, 인테리어에 대해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주택에서도 인테리어나 가구, 장식 등이 많이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글은 그같은 관심보다는 이탈리아의 「시민생활지상주의」에 초점을 맞춰 주택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인권으로서의 주거와 주택을 목표로 전개되었던 시민투쟁의 역사를 중심에 두고, 이탈리아 주택인권사상의 형성과정을 고찰하고 싶다. 그 외 이탈리아의 독특한 토지제도, 주택복지제도 등의 법제도 측면이나 도시계획에 있어 주민참여제도는 주택인권사상 발전의 한 단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도시의 사상」이다. 도시국가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탈리아에서는 「시민이 공유하는 도시생활공간」의 문제는 「인권으로서의 주택」문제와 함께 사회발전의 따라 그 절을 높여 왔다. 따라서 그 절을 높여 왔다. 따라서 그 절을 높여 왔다.

2. 전후 주택운동과 주택인권사상의 발전

인권으로서의 주택과 「주택투쟁」

경제성장의 성과물 기업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생활상승으로 확대하는 일은 국가나 자본가에 대해 요구해야 될 목표였다. 따라서 시민의 주거권이 이같은 목표 중의 하나로 된 것은 당연하다. 특히 공공주택은 시민들의 국가에 요구해야 될 중요한 권리였다.

공공주택은 대도시 인구증가와 생활환경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의 사회관리로서의 도시계획」에서 위치지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생활권으로서의 주택이 사회투쟁의 중요한 과제로 된 것과 그것이 노동조합, 학생운동, 시민운동의 넓은 관심을 모은 배경에는 「인권으로서의 주택」이라는 인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즉, 인권사상에서 출발한 주택정책, 도시정책인 것이다.

2차 대전 전에도 공업화가 늦었던 폐진국 이탈리아가 전후의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노동력이 필수적이었다. 같은 나라 안에서 남과 북이 서로 역사와 발전정도가 크게 다른 이탈리아는 부유한 북부가 가난한 남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이 국제경쟁에 대처했다고 할 수 있다. 시칠리아나 카라브리아처럼 개발이 뒤쳐진 남부지방에서 대량의 노동자가 롬바르디아, 피에몬테, 리그리아 등의 북부공업지역으로 이주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인구 20만 정도의 중소도시가 100만을 넘는 대도시로 급속히 번오했다.

공업도시에서는 인금을 써게 유지하기 위해 주거비 뿐 아니라 생활관련의 도시기반시설도 써게 묶어둘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많은 남부 출신 노동자는 극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급속히 공업화를 추진한 이탈리아는 영국 등에서 이미 2차 대전 전부터 개선되기 시작했던 생활환경 빈곤화가 뒤늦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기적이라고도 할 경제성장을 실현한 이탈리아는 1960년대 초반부터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위기로 대두되었다. 전후의 이탈리아 네오 리얼리즘으로 알려진 영화들이 당시의 서민생활, 주택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역주 : 「사건거 득득」, 「무방비 도시」 같은 영화들이 이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1950년대에 「기적의 경제부흥」을 이룩한 이탈리아의 이 어두운 측면에 주목하면 2차 대전 기근부터 도시 레지스탕스 운동의 중추역할을 담당했던 사회주의 세력이 노동자들을 폭넓게 포섭하여 투쟁을 촉발시킨 상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투쟁을 통해 공공주택정책을 개선시켰다. 이것을 「주택투쟁」이라고 한다.

주택투쟁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계급투쟁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도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가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에

게는 주택투쟁은 생활권, 인권을 지키는 투쟁이었고 광범한 지지를 모을 수 있었다. 인권이나 노동조합이라는 말도 「주택」이라는 단어와 함께 다가올 때 시민들에게 보다 현실감을 주었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시민투쟁으로서의 주택투쟁의 고양

이처럼 이탈리아는 노동조건 개선 뿐 아니라 주택개선, 사회복지의 실현 등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노동운동이 광범하게 확산되었던 것은 세계적으로 앞서 있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는 계급투쟁에 의해 획득한 「인권으로서의」 주택, 도시주택제도라는 인식이 있었다. 특히 중북부 도시를 중심으로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던 코무네(자치체)들은 이같은 인식이 강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급속한 공업화를 이루면서도 주택개선이나 사회복지의 실현에서는 크게 뒤쳐졌던 일본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하다. 특히 전후에 사회주의 정당들이 교조적인 내부투쟁을 거듭하면서 국민의 생활을 망각한 정치몬처에만 집착하여 지지를 상실한 일본과 비교해서, 생활의 질 개선에 더욱 중점을 두면서 주택문제를 인권문제로서 다룬 이탈리아와 큰 차이를 느끼게 한다. 결국 노동운동이 생활지상주의의 확립을 목표로 한 시민투쟁이었던 것은 이탈리아에서는 명확하다.

이탈리아의 노동운동이 인권으로서의 주택을 위한 투쟁을 포괄하여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일본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당이나 노동자, 시민 모두 이데올로기적, 정치·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생활에서 유리된 비물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던 일본과 비교해서, 이탈리아는 집이라든지 거리, 탁아소, 축구장, 공영식당의 매뉴 등 보다 구체적인 투쟁목표에 중점을 두고 생활상에 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이것은 도시와 주택을 둘러싼 학문영역에서도 명확하다. 일본에서는 물리계획을 다루는 학사와 법률, 제도, 경제, 제정을 다루는 학사 간에 단절이 있었는데, 이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 소위 도시계획학이 물리계획을 전제로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발달한 일본과는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도시계획

학을 '아바니스틱카'라 부르는데 비물리적인 계획 측면을 중시하는 학문이다. 또 이 학문은 19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에 전개한 시민투쟁 속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뜨거운 가을」과 주택인권

이탈리아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 말에 시민투쟁은 정점에 달했다. 과거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 시대를 맞이했던 것이다. 新舊의 대립에 따른 사회적 긴장은 특히 도시에서 폭발했다. 젊은 사람들은 대학과 고등학교의 기성세대에 반항하여 격렬하게 공격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와 주택의 관리자인 자치체 행정기구와도 충돌했다. 그 과정에서 젊은이들은 노동자, 시민의 투쟁에 동조하여 공동전선을 확대해 갔다. 이것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이 1969년 가을, 소위 「뜨거운 가을」의 대중투쟁이었다.

노동운동은 이미 노동자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핵심과제라는 점을 자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임근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전통적 쟁점에 덧붙여 사회적 권리라는 투쟁요구를 내걸었다. 1969년에는 시민이나 학생을 포함해서 우선 시기 생활상을 주택, 보편의료제도, 시설, 학교, 대중교통을 문제로 했고 이어서 자치체 내부의 근본적 개혁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요구로 확대해 갔다.

도시권리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한 결과 지구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70년에는 「地區評議會」로 제도화되었다. 주택문제도 이 지구협의회를 통해 논의되게 된다. 수많은 농성, 시위가 나타나고 주택제도가 각 도시에서 조직되어 시민 공동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또한 헌법에는 정해졌지만 20년 이상 실현되지 못했던 지방분권화를 위한 주정부 구성이 추진되었다. 나아가 도시화의 문제, 지역 편중 발전, 잘못된 성장모델에 대한 반성, 불충분한 공공사업, 부패한 정치기구는 매일처럼 매스컴에서 다뤄졌고, 일상생활의 문제와 함께 공장이나 지역사회, 대학 강의실에서 논의되었다. 일본의 대학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전개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명백하다. 대도시에서는 노동자와 저소득 계층이 부동산투기를

전디기 어려운 심황이 있었다. 임금에 맞는 한 가격의 주택이 부족했고 불충분한 사회시설이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시설도 부족했다. 인구과밀의 사회적 비용부담은 특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고, 공장에서의 노동시간에 덧붙여져 긴 통근시간을 복잡한 대중교통수단 속에서 견디지 않을 수 없었다. 도시계획, 교육 제도, 의료제도, 주택, 행정 서비스, 대중교통체계의 개혁, 지체된 남부 이탈리아의 공공사업의 개혁, 농업정책의 개혁이 학생, 시민에서 정당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세력간에 치열한 쟁점이 되었다.

도시에서 「생활자」가 한마음이 되어 도시와 주택의 문제를 고찰할 기회를 가졌던 시기가 「뜨거운 가을」이다. 운동은 학생, 시민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나 기업에 대해 도시와 주택, 인권과 생활권 회복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도시계획제도의 개혁을 촉진했다.

3. 도시계획과 주택제도의 개혁

주택인권사상과 도시계획

도시를 경제활동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이다. 그 활동의 장에서 공공공간을 정비하고 충분한 도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사회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과제이다. 동시에 자력으로는 충분한 주거수준을 얻을 수 없는 계층을 위해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시책은 민주적 국가에서 당연하다. 이 도시정비와 주택정책은 공공복지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

많은 사회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주택에 관해서도 민주주의, 시민 중심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권리로서의 공공주택을 공급받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사회복지적 성격을 지닌 공공주택의 존재여부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한다. 이제까지 서술한 것처럼, 이탈리아에서는 1960년대, 70년대의 민주적 시민투쟁의 시대를 통해 주택인권 사상이 발전하고 정착한 것이

다.

이같은 인식에 바탕을 둔 최초의 법률은 주택공단을 설치하기 위한 「로얄티법」(1903년)이다. 그러나 이 법은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자치체가 도시계획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도시와 주택을 이원화시킨 문제점이 있었다. 도시와 주택은 분리해서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2차 대전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 결과 이러한 제도는 이탈리아가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이행하고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했던 시대에 심각한 결함을 노정시켰다.

전후 세정된 공화국 헌법 제1조에서 정해진 것처럼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를 둔 공화국」이다.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공업국이기도 한 이탈리아는 이 헌법 제정 후 40년에 걸쳐 민주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해 왔다. 따라서 오늘날 주택정책은 자본도 투지도 아닌, 노동하고 있고 노동해 온 시민의 생활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2차 대전 후 시민투쟁의 성과인 주택복지의 핵심은 위에서 말한 결핍의 극복이다. 즉, 국가의 공공주택자금 사용처와 국가, 주, 자치체의 도시행정에 있어서 통합적인 주택계획, 건설방법이 이 투쟁을 통해 논의되었다. 그 중에서 항상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은 병행해서 논의되었다. 그 논쟁의 초점은 말할 필요도 없이 토지문제였다. 이탈리아는 이 점에서 획기적인 법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시민투쟁의 성과가 있었다.

주택용지 수용법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조지 중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만한 것은 1962년 제정된 「지방자치체가 저렴한 시민주택용지의 취득을 촉진하는 법률」(167호)이다. 이 법률은 도시의 심각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 토지문제에 관해 자치체의 역할과 권한을 정한 것이다. 이 법에서는 인구 5만명 이상 또는 현정 소재시의 자치체는 향후 10년간 필요한 택지의 최소한 50%를 자치체 당국이 수용권을 발동해서라도 확보하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이 획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토지수용 보상액을 자치체가 수

용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2년 전의 시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 방식은 단순히 공공사업 실시에 따른 명목 상승분을 보상액에서 공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투지가격 그 자체를 동결하여 투지투기를 근절하려는 사상을 지닌 획신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산정방식은 그 후 위원관결을 받아 약 100년전인 1885년 「나폴리 보통법」(2892호법)에서 정한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다. 여기서 보실래는 그 토지의 시가에 과거 10년간의 임대료 총액을 더하여 2로 나눈 값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이 방식에서는 도시화가 많으로 진행될 토지에서는 과거 10년간의 임대료는 시가보다 싸지만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이 차이는 적고 시가에 가깝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어서 다음해인 1963년에도 역시 주목받을 만한 「토지중개세법」(246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자치체에 개발부담금의 징수를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15년간의 논쟁 뒤에 1978년 「부카로시법」에 이르러 단계적으로 3종류로 정해져서 농지수용가격 산정방식으로 적용되었다.

이처럼 긴 논쟁을 거쳐 수용가격이 원가주의로 발전했는데, 협동조합주택이나 민간주택까지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 대해 자치체가 계획적으로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를 확립한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비시가지의 택지화 즉, 도시의 확대를 자치체가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정한 것으로, 지방행정차원에서 도시와 주택이 일원화되었음을 뜻한다.

167호법에서는 토지수용규정 외에 자치체의 신규 주택계획, 주택공급계획을 정하고 유자주택, 협약주택 등에 대한 주택공급 규정도 구체적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공공적 성격을 지닌 주택을 지원성하고 주택용지의 공급을 개편한 것은 10년 후의 일이다.

주택법의 성립

「뜨거운 가을」의 시민투쟁에서 주택과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절정에 달했다. 다양한 세력들마다 서로 달랐던 노동운동의 요구도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치했다. 노동조합의 주도 아래 이 문제는 일지에 폭발했다. 부동산 투기, 167호법의 실효성 부족, 주택관련 공공사업의 부족과 초과부채,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공급된 주택을 이용하는 사람들간의 불평등과 비효율성이 규탄되었다. 당시 수많은 대중의 지지를 얻었던 '주택투쟁'은 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의 뒷받침을 받아 '공공주택건설계획' 조정을 위한 법률 1971년 주택법(865호법)이 사회당의 공공사업 정관에 의해 제정되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률은 이제까지 주택관계법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공공주택의 공급과 경영, 관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이었다. 이 개혁은 정부의 주택부문 재정난을 조지경비로 해결하고 주택투쟁에 있어서 임주자의 심사기준, 임대료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개혁했다.

이 법률에 따라 '시범서민주택'이나 '근로자 주택' 등으로 불렸던 주택들이 공공주택으로 명칭을 통일했다. 공공주택 사업을 일원화한 것은 국민이 누릴 권의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출연한 자금과 기업 및 국가의 자금을 일정액 더해서 운영하던 노동자주택협회('체스킬')은 해산되었고 기타 주택공급단체도 통합되었다. 공공주택은 주마다 소속된 IACP(국민주택협회)가 공급함으로써 자치체 차원에서 도시계획과 통합한 주택행정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자치체는 공공주택의 양과 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체스킬과 같은 대규모 공공단체의 해지를 둘러싸고는 기독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들이 격렬히 반발하기도 했다.

4. 자치체에 의한 공동체 형성과 주택건설

자치체(코뮤네)의 도시주택공급 조직

이탈리아의 공공주택에는 국가차원에서의 공공주택과 코뮤네(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영주택이 있고, 이 밖에도 노동자 조직, 조합 등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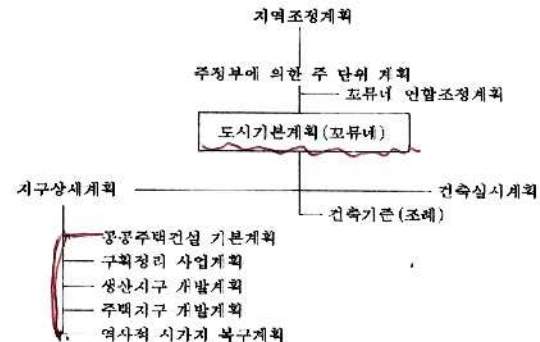
한 협동조합주택 등이 있었다. 이것이 1971년의 865호법에 따라 자치체 하에 일원화된 것이다.

위 법률에서 '협약주택', '보조주택'의 제도를 정한 것도 중요하다. 종래의 공공단체에 의한 직접 공급 중심에서 자금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을 도입함으로써 개별 주택건설자, 거주자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변화시켰다.

'협약'과 '보조'라는 주택제도는 정부가 정한 건축기준을 만족하고 임대료 통제법에서 정한 임대료로 임대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 주택은 당연히 자치체가 정한 도시기본계획과 지구상세계획을 지켜야 한다. '협약'은 저리의 대출, '보조'는 자금의 직접 지원이다.

〈그림 1〉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치체는 도시기본계획을 독자적으로 정하고 관련된 하부계획을 책정한다. 또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택지를 공급한다.

〈그림 1〉 이탈리아의 도시계획제도 개요



한편 주택건설자금은 국가 종합경제계획에 따라 배분된다. 국고보조금은 공공 주택 건설위원회가 수립한 국가 종합경제계획에 근거하여 10년, 5년, 2년 단위의

중단기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가로보존과 시민주택 공급

충분한 재원을 갖고 있지 못한 이탈리아의 사치체가 도심의 역사환경보존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구나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부동산투기가 기승을 부려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은 감소했으며, 전통적 거리는 사라지고 주민들은 쫓겨날 운명에 있었다.

이 때문에 불요나시는 1972년도부터 73년도까지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역사적 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저렴시민주택 계획을 채용했다. 이것은 공적자금용 융원하여 역사적, 문화적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교외주택을 건설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도시주택 두 영역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기법이다. 즉, '역사적 도시'에서 '거주'한다는 생각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사업이다.

역사적 시가지의 재개발용지 일부(18%)는 공공소유로 하여 주택을 재건축했다. 기타 민간소유지는 가옥주와 교섭하여 협약주택을 건립하고 국가와 2주간에 20년에서 25년의 계약을 맺었다. 가옥주는 계약기간 동안 전 임대료를 부과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재건축을 위한 비용의 대부분을 저리의 공공주택자금에서 빌리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임주자 관리는 자치체가 직접하기 때문에 원주민이 우선적으로 계속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료도 수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민측에서 보던 시영주택과 저의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시구평의회는 이 사업의 전 과정에 참가하여 주민주택의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부네는 도시계획과 공공주택계획을 수립하고 지금은 국고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같은 제도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2차 대전 후 계속해서 이탈리아 공산당이 시정부에서 집권했던 불로냐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진정한 시민의 입장, 생활자의 입장에서 도시계획행정을 전개한 역사가 거의 없는 일본에서는 유리 교유니즘의 역할과 관련해 주목해야 될 바다.

이탈리아의 현재 주택문제

그러면 1980년대 이후 주택운동은 어떤 투쟁목표를 가지고 있을까? 최근 이탈리아의 주택문제를 살펴보자.

주택공급의 양적 부족 문제는 주택정책이 지방분권화된 후에도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실제 지금도 주택부족문제는 심각하며, 주택난은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임대료 통제를 받는 서민용 주택은 대단히 부족한 형편이며, 그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국인용 주택 등은 높은 임대료로 임대되고 있다.

반면 주택의 질은 대단히 향상되었다. 면적, 밀도 등 물리적인 수준도 향상되었고 주택설비, 장식 등도 나아졌다. 특히 노동자 주택이라 해도 임대료나 구입가격이 싸기 때문인지, 호화가구를 들여놓고 있다. 소득에 비해 전반적으로 주택의 질이 높은 것은 일본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다.

한편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가소유가 늘고 있다. 다만 급격한 자가소유화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주민은 정기간 거주와 불하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치체의 주택제도가 급감한다는 차원에서 주택정책은 장기적으로 안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자가소유화는 주택사업이 비대화된 것에 따른 문제인데, 부동산투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가져오고 있다. 결국 최근에는 이탈리아에서도 자가든 임대주택이든 시민의 주택에 대한 의식이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신규 주택공급은 주거환경 정비와 함께 도시개발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도시의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 그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환경이 필요한가? 도시개발과 주거환경 계획의 문제는 도심부, 주변부, 교외에서 각각 서로 다른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교외주택의 환경개선은 중요한 과제이다. 소위 교외지역 주택단지형 개발이 나타나서 쾌적한 주변환경 때문에 인기가 높지만 대도시 주변의 사원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높다. 그런데 이들 땅은 1960년대부터 자치체가 장래를 내다보고 토지를 취득해 두었지만 도시화가 지연하여 교외의 수용능력이 이

용되지 않은 채 남겨진 것들이다.

도심부와 그 주변부에서는 노후주택의 개량과 역사적 건축물의 복구가 중요 테마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주변의 개량은 완전히 상업화되어 있는데, 역사성이 높을수록 상품가치도 높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의 생활을 일컬어 '오래된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주택문제에서 가장 긴급한 과제는 위법건축물 문제이다. 주택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이라도 사려는 주민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서는 건축의 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도시계획체도를 가지고 있지만, 계획과 규제가 따르지 않는 건축행위도 많은 것이다. 더구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주택난 때문에 시민들은 이런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자치체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 차원에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에 의한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다.

5. 생활공간으로서의 환경문제의 발전

주택문제에서 환경문제로

주거의 문제는 시민의식을 통해 도시, 지역, 국토를 포괄하는 환경문제로 확대되면서 복지와 문화를 결합시키는 인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것은 경제성장의 논리에서 생활의 논리, 생활의 질 향상, 생활공간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던 이탈리아 도시주택운동의 성과이다.

이 책의 전반적인 과제인 '주거를 비롯한 도시, 지역, 국토환경 전반에 걸친 생활공간이 복지와 문화의 기초가 되는 사회 - 소위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생활공간을 실현한다.'라는 명제가 언급된 만한 이탈리아의 환경문제 테마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의 1980년대, 90년대의 도시계획학의 발전상은 분명 이 점에 있다.

시민생활을 바탕이 되는 '주거를 비롯한 도시, 지역, 국토'를 '생활공간'으로 다루고, 그 「증거형태」로서 「복지」와 「문화」가 명확히 자리잡는 「도시, 지역, 국토 계획」이 발전해 온 것이다. 이것이 소위 오늘날 이탈리아의 환경문제의 중요한 측면이다. 결국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생활공간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상식이어서 서산 강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에서 지역 환경으로 연결되는 이탈리아 도시계획학의 연속성은 「주택인권사상」의 체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운동의 앞으로의 과제

이탈리아에서 생활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이탈리아인의 여유있는 생활을 부러워한다. 이탈리아의 「생활지상주의」와 「도시의 사상」에서 배울 점은 많다. 왜 이탈리아인은 쾌적한 도시에서 사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탈리아 도시 특유의 여유 있는 생활, 즉 주택인권사상에 큰 이유가 있다. 도시와 시민이 한 몸이 되어 사회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인권확립을 위한 투쟁의 장에 나섬으로써 소위 골심양면에서 주택인권사상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젊은이들은 이제서야 그 지향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활을 증진시키는 사고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과 생활의 여유가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과제로서 일본인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의식을 정확히 파고드는 것이 주택운동의 목표인 것이다.

주택문제는 도시, 지역, 국토의 모든 차원에서 「복지」와 「문화」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논리에서 생활의 질 향상, 생활공간의 향상이라는 과제를 조속히 제기하는 것이 시민운동의 과제라는 점을 일본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운동은 주택에서 시작하여 생활의 질로 확대하는 큰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이탈리아의 주택인권 사상의 발달은 이런 의미에서 선진적이다.

하비타트 의제를 한국 주거권운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1)

Adaptation of the Habitat II Agenda to Housing Rights Organizations in Korea

박문수·김은희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1. 들어가는 말
2. 하비타트 의제 분석
3. 하비타트 의제를 지역주민운동에 적용하기 위한 개념들
4. 주거권운동의 관심사와 이슈에 대한 인식
5. 두 번째 읽개를 통해서 본 주민들의 세계관
6. 요약과 결론

요약문

하비타트 의제를 한국의 주민운동, 특히 주거권 운동에 적용하기 위해서 주거권운동을 하는 사람들간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여기서 하비타트의 정신을 따르는 사회운동의 국제적 차원에 대한 설명을 들은 참석자들은 그들의 관심사를 표현하면서 3개년의 실천계획을 만들었다. 이 과정을 진행하고 관찰하면서 사회운동과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이론을 적용해서 주거권운동의 과제를 제시했다. 또 대화의 참석자들은 상황행렬을 작성했고, 연구자들은 이 자료에 기초해서 참석자들의 세계관을 분석하고 이를 하비타트 의제의 생태학과 비교했다. 이 연구과정에서 하비타트 의제를 가난한 사람들의 '세력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비타트 의제에서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세력을 얻기 위한 이슈가 무엇인지 유의해야 한다는 것, 참석자들의 지방정부, 기업체, 국제차원의 관계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요어: 유엔인간정주회의, 하비타트 의제, 주거권운동, 상황행렬, 지속가능한 인간개발, 대안적 개발, 생태학, 세계관, 능력 개발 전략

1) 본 연구는 1996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 채택된 의제(이하 "하비타트 의제"라 칭함)를 서울에서 활동하는 주거권운동 단체들의 고유한 목적과 투쟁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교육 자료와 교육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유엔의 제 2차 인간정주회의(이하 "하비타트 II")는 1996년 6월 이스탄불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 참석한 171개 국가의 대표들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고, 생산, 소비, 교통 등의 인간정주 유형이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계획을 담은 의제를 채택했다. 하비타트 II는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빈곤이 퍼져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주거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상황 인식과 현재 세계의 지배적인 발전양식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간다운 생활을 마련해 주고 있지 못하며, 환경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속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점증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하비타트 II는 비정부조직들의 회의와 같은 여러 가지 회의를 병행해서 개최해 수백명의 비정부조직 회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그들에게 하비타트 의제에 대한 토의를 듣고, 때로는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러한 비정부조직 회의 외에도 시장(市長), 기업경영인, 학자, 종교지도자, 노동조합, 국회의원 회의도 개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회의를 통해 국가, 지방정부, 비정부조직, 기업, 지역주민간의 "파트너십" 개념

이 증진되었다.

이 연구는 자원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환경이 보다 잘 보호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속가능한 인간개발" 개념과 가난한 이들의 "세력화"라는 개념을 가르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작성된 것이다.

2. 하비타트 의제 분석

1) 하비타트 의제의 '대안적' 개발 개념

하비타트 II에서 채택한 의제는 단순히 회의 절차상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그 후에 수행되어야 하는 정책과 실천을 말한다. 그것은 서론, 원칙과 목적, 과제, 세계실천계획(Global Plan of Ac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세계실천계획이 이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 전략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비타트 의제는 1990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회의의 '의제 21(Agenda 21)'과 유엔 사회개발정상회담(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의 세계실천계획과 같은 세계의 대안적 개발양식에 대한 전지구적 실천계획이다. 그러나 각국의 정부 대표들이 세계실천계획을 공식화했다고 해서 바로 대안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세계실천계획을 만든 사람들과 그들에게 지문을 해준 많은 집단들이 대안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그 초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계실천계획이 현재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근대화, 성장 극대화 전략으로 다시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비정부조직의 지속적인 참여와 간섭은 그 문서의 많은 부분에서 대안적 개발이라는 용어를 자주 등장시켰다. 반면 문서의 공식적인 편찬자들은 시장에 대한 탈(脫)규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그러한 정책이 "권한 확대(enablement)"라는 도식에 잘 들어맞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하비타트 의제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준 "대안적 개발"이란 무엇인가? 일찍이 예언적으로 이러한 개념이 표현된 저작 중의 하나는 슈마허(Edward Schumacher)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로, 이 책에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Schumacher, 1973). 대안적 개발을 요구하는 역사는 존 프리드만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1960년대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정치의 민주화를 가져 온 신사회운동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개발양식은 유엔환경계획(UNEP)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친 전문가들에 의해 학술적으로 이론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Friedmann, 1992: 2). 프리드만에 의하면 대안적 개발 이론은 초기에 "환경과 조화되는 인간 중심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대안적 개발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로 사용하는 정책인 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을 자신들의 신조로 삼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논쟁 중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인에도 불구하고, 대안적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1990년도까지 개발의제에 빈곤문제를 다시 포함시키도록, 그리고 환경과 여성 관련

부서를 새로 설립하도록 세계은행에 압력을 가했다(Friedmann, 1992: 6). 프리드만에 의하면 생산과 이용보다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대안적 개발은 기업체의 입장과 대비되는 가구(家口)라는 관점에서 생활 상태 및 생계 문제를 개선하려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생활과 생계에 영향을 주는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인 3가지 차원에서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사회적 힘은 정보, 지식, 기술에 쉽게 접근하고 사회단체에 참여하며 재정적 자원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적 힘은 투표권을 포함해서 지역모임, 정당, 사회운동, 이해집단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힘은 성과를 내는 실천행위나 대인관계 기술 및 경험을 통해 더욱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Friedmann, 1992: 31-33). 정리하면 대안적 개발이 환경과 조화되는 인간 중심의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소득 가구의 세력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일찍이 주거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존 터너(John F. C. Turner)는 대안적 개발이 "새로운 페리다임"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 페리다임이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채택했음을 의미한다. 그 이전의 페리다임에서 주거의 가치는 주택의 여러 특성을 수량화함으로써 충분히 측정될 수 있다고 가정했지만(그 주택의 주위환경이 포함되는 경우도 때론 있었지만), 이제 페리다임에서 주거의 가치는 사람들의 요구(needs)와 그들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고 가정한다. 즉 그 가치는 주택을 마련하는 절차, 그 주택의 산물, 주위 환경, 그리고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환경이 거주하는 사람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Turner, 1997: 165-6).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는 이 새로운 페리다임에서는 주거와 마을의 건축, 관리, 개량을 전체적인 동학(dynamics) 안에서만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우주의 축소로서의 인간사회(microcosm)'으로 파악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 새로운 페리다임에서는 경제를 하나의 생태계, 즉 지구상의 생명을 온존하게 하는 여러 조건들의 총합체로 파악한다. 터너는 "공동체 건설"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는 활동과 제도를 통해서만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② 공동체들끼리 유대관계를 맺으며, ③ 지구를 지배한다는 개념 대신 "흙의 공동체(soil community)"에 대한 소속감을 발전시켜야 한다(Turner, 1997: 167). 여기에서 "자유롭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과 "공동체간의 유대"가 의미하는 것이 프리드만의 "세력화"와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두 유명한 학자 모두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대안적 개발을 사용한다. 즉, 유대관계를 맺는 공동체 건설을 통해 사람과 가구를 세력화해 그들의 삶과 생계에 우선 순위를 두는 개발로써 지역과 전 지구의 환경을 고려한 상태에서 조화로운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둘 모두 현재의 지배적인 개발양식에

몇 가지 요소, 즉 경제성장과 계획과정에서의 국가나 국제기구의 역할 등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그들은 보다 인간다운 생활과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과 이용 창출 방식에 대한 투쟁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재의 지배적인 개발양식에서는 생산의 증가와 이용의 보장이 공평한 분배와 환경보전보다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하비타트의 세계실천계획이 세계경제를 하나의 생태계로 여기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지배적인 개발양식보다 대안적 개발의 성격을 가진 실천행위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의제의 한계성, 특히 의제의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한계성을 지적하도록 하겠다.

2) 하비타트 의제의 생태학

하비타트 의제의 작성자들은 세계경제, 사회, 정치를 하나의 생태계로서 바라본다. 그들은 하비타트 II의 목적을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와 '지속가능한 인간정주'로 설정했다(#23 참조)라. 그러나 그들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복적이 달성될 때만이 이 두 복적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세계실천계획은 이 두 주된 복적의 복합체 — ①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절한 주거, ② 도시화되어 가는 세계의 지속가능한 인간정주개발, ③ 능력 개발과 제도적 발전, ④ 국제 협력과 조정, ⑤

2) 한국도시연구소 역(1997). 하비타트 의제에는 실마디 번호가 붙어 있는데, 이 글에서는 해당 내용이 있는 짚을 번호로 표시하겠다.

하비타트 의제의 실행과 후속 사업 —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의제는 각 주된 목적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보완적 목적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생태학적 관점은 이들 상호보완적인 목적들의 중점을 분명하게 예시(例示)한다.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능력 개발과 제도적 발전이라는 주된 목적에서 나온 요소인 **취약성의 감소와 예방, 주거 정책에 있어서의 차별성 배제와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능력 개발과 제도적 발전이라는 목적에는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인간정주지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운동조직(Community-based Organizations)의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181 참조) 하비타트 의제에서 강조한 여러 목적들의 복합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는 도시(圖示)는 본 연구자가 이전에 쓴 글에 잘 나타나 있다(박문수, 1996: 210-215). 또한 하비타트 의제의 제 2장 목적과 원칙을 최종적으로 요약해 놓은 절에 이러한 생태학적 시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34 참조).

3) 지역주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정책과 전략

세계실천계획은 소위 **"능력 개발 전략(enabling approach)"**이라 불리우는 것에서 매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능력을 개발하기(enabling)", "능력 개발(enablement)"이라는 표현이 거의 모든 페이지에 등장한다. 그러나 이 개념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 또는 사회적 약자의 세력화라는

개념과 어떻게 관련되고, 또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자.

네델란드 외무부에서는 하비타트 II 회의를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개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책자를 발행했는데, 여기에 이 개념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나와 있다. 그 책에서는 능력 개발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능력 개발 전략은 정부가 개발을 이루기 위해 사회에 간섭하지 않고,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그것이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통적인 능력 개발 전략은 정부영역 이외의 시장 메카니즘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하고,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지어진 주택을 합법화하고 제도적 수정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Kolstee, Bijlmer and van Oosterhout, 1994: 140). 도시빈민 주택부문에 이러한 접근법은 기존의 공공주택정책이 실패하고, 「집터와 서비스(sites and services)」 접근법 또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생겨났다. 공공주택은 "위로부터의" 정책인데, 이 정책은 가난한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 '집터와 서비스' 접근법은 "아래로부터의" 정책으로, 이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에는 종종 잘 들어맞았지만 예산이 과도하게 필요하고 민간부문의 이해관계 때문에 미친가지로 실패했다. 따라서 이 방법은 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부가 적은 비용으로 공공주택을 위한 부지를 마련할 수 있을 때만이 효과적이다(Kolstee, Bijlmer and van Oosterhout, 1994:

124).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주거문제에 있어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만 하고, 정부는 이들과 이들의 조직체, 그리고 외부 지원 세력인 비정부조직이 추동력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따라 UNCHS는 1986년의 인간정주 보고서에서 능력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이후 이 전략을 따르도록 계속적으로 권고했다. 1991년 세계은행은 능력 개발 전략의 기본 전제를 따르는 주택정책 관련 의제를 새롭게 채택했고,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개발계획(UNDP)과 같은 많은 다른 유엔 조직체들도 이러한 전략을 채택했다(Kolstee, Bijlmer and van Oosterhout, 1994: 126-127). 1996년 3월 방콕에서 열린 제 2차 아시아-태평양 도시회의(the second Asia-Pacific Urban Forum)의 보고서에도 '집터와 서비스' 접근법과 같은 직접적인 정부 개입에서 능력 개발 전략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많은 사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Wakely and Allani, 1996: 12-22).

이러한 설명을 통해 우리는 능력 개발 전략이 정부와 금융 지원 조직 **특히 각 나라들이 발전하도록 원조를 제공하는 국제기구들의 정책이며, 또한 이 기구들이 개발도상국 정부에 권고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세력화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사회적 약자가 비정부조직과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도움과는 별도로 스스로의 힘으로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능력 개발 전략 자체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세력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참여라는 능력개발전략의 목적을 성

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세력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능력을 세고시키고, 그들의 조직을 인정하고, 공동체 조직과의 파트너십, 비공식부문의 인정과 지원 등등과 같은 능력개발전략의 몇 가지 방법들은 분명 가난한 사람들의 세력화를 용이하게 한다. **만면 시장을 개방하고, 탈규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같은 정책은 능력을 개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의 세력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그들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기도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능력개발전략 또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의 표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실천계획의 두 가지 주된 목적, 즉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와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에서 권고하는 정책과 전략들을 분석해 보았다. 밑에 설명할 이 연구의 개념틀에 따라 전술의 범주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체,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같은 **"행위자"에 초점을 두는 차원과 법, 행정, 언론, 교육, 세정 및 금융, 문화적 가치관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두는 차원 두 가지로 개념화를 시도해서 보다 자주 등장하는 전술 유형의 수는 <표 1>에 밝힌다. 이 표에 의하면 가장 자주 언급되는 전략은 다음의 4가지 즉 **"서민들에 대한 배려 증대", "홍보, 정보의 공유, 대중 교육",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절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로, 이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세력화를 용이하게 하는 것들이다. 또한 세력화****

<표 1> 세계실천계획의 목적별 행위유형

행위유형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기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 정책의 통합적 적용	7	4.4	22	8.4	29
(2) 정책 평가 및 개혁	15	9.4	5	1.9	20
(3) 투명성, 시민에 의한 책무	5	3.1	4	1.5	9
(4) 새로운 유인, 법, 행정절차	10	6.3	13	5.0	23
(5)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2	1.3	17	6.5	19
(6) 결정과정에 시민참여	13	8.1	17	6.5	30
(7) 연구, 전문적 교육	9	5.6	19	7.3	28
(8) 금융, 자원의 동원	6	3.8	10	3.8	16
(9) 새로운 기술	5	3.1	9	3.4	14
(10) 생산효율성, 고용기회 증대	9	5.6	6	2.3	15
(11) 서민들에게 배려를 증대	25	15.6	30	11.5	55
(1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18	11.3	18	6.9	36
(13) 소기업, 비공식부문, 공동체	12	7.5	8	3.1	20
(14) 소지역에 기반한 지역행정	7	4.4	12	4.6	19
(15) 소비의 감소, 재활용 등	1	0.6	19	7.3	20
(16) 홍보, 정보의 공유, 대중교육	9	5.6	29	11.1	38
(17) 기타	7	4.4	23	8.8	30
계	160	100.0	261	100.0	421

를 용이하게 하는 "소기업, 비공식부문과 조합 및 공동체의 자조활동을 증진", "정책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등의 전략도 매우 자주 언급되고 있다. 단 "투명성, 시민에 의한 책무"와 같은 전략은 그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지배적인 개발모델에서 강조되는 "연구, 전문적 교육", "금융, 자원의 동원", "새로운 기술"과 같은 전략들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력화를 용이하게 하는 능력개발 전략들이 자주 언급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났다. 첫째는 UNCHS가 하비타트 II의 사전준비단계로 의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한 정책들을 강조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

는 비정부조직에 의해 그 문서에 그러한 견해가 표현되도록 압력이 가해졌다는 점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의 세력화를 중시하는 정책과 전략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계 실천계획은 정부가 그러한 세력화를 용인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실천계획의 각 부문에서 정부의 계획, 의사결정, 실행에 비정부조직과 주민운동조직(CBO)의 참여를 중시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온다(#76을 참조. "모든 사회경제 집단이 토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점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계획, 특히 비정부조직과 주민조직의 능력을 개발하고 경험을 축적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의 주택실천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효율

적이고 유능한 동반자가 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 문서의 몇몇 부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의 세력화를 명시적으로 고무하고 있다(#18 참조. "자발성과 창의성을 북돋아 주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이나 국내외적인 협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나아가 가난한 사람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인간정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empower)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참여의 토대이다." 그리고 #175 참조. "권한 확대 전략, 능력 개발, 제도적 발전은 모든 관련 집단, 특히 지방정부, 민간부문, 협동조합부문, 노동조합, 비정부조직, 지역 주민조직에 주택과 인간정주에 대한 계획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주어(empower) 효과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세계실천계획이 세력화라는 용어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풀뿌리 지역운동조직에 적용하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세계실천계획이 정부에 적합한 실천계획을 말하는 것이 지역조직에 적합한 실천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조직이 그들의 세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슈를 잡아내고, 행동뿐만 아니라 논쟁과 같은 기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Mondros and Wilson, 1994: 229-231). 물론 세계실천계획에 그와 같은 실천계획이 부족한 이유는 하비타트 II가 파드나심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하비타트 의제가 정부 대표자들의 승인에 의해서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즉, 비정부조직은 문서의 내용을 결

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문 역할만을 수행했다.

세계실천계획의 두 가지 목적과 관련해 권고되는 421개 전략 중 현재의 정책을 미만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평가와 개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잘못된 점의 시정을 명백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그 문서가 현재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심가는 이유는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들의 승인을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안적 정책에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을 표현하지 않고 능동적 실천을 강조하는 이러한 편향성으로 인해 그 문서를 지방이나 국가적 상황에 적용할 때, 그리고 풀뿌리 자치조직이나 사회운동조직이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의 세력화를 도모할 때 나타나는 여러 이슈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

4) 하비타트 의제의 특성과 한계성

따라서 대안적 개발 개념을 사용할 때, 하비타트 II 세계실천계획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전지구적 공동체는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기와 지속가능한 인간정주라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태학적 인식, ② 계획과 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국가의 지배적 역할에 대한 인식, ③ 국가는 지방정부, 민간부문, 비정부조직, 주민들과 연대를 맺어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정책결정 및 이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비정부조직과 주민들의 능력을 세고시켜야

국가인권센터

한다는 점.

대안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실천계획의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가난한 사람들 및 그들 조직의 실천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능력 개발 전략을 실현하는 데 정부의 역할만을 강조한 점, ②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와 지속가능한 인간정주를 가로막는, 즉 부동산 거래를 통한 초과이윤, 생산활동 없이 순전히 금융 거래를 통해 창출된 이윤, 이윤을 창출하나 고용을 감소시키는 정책, 국가간의 균형 분배를 가로막는 국제정책, 과도한 군비 지출, 정부 부패 등과 같은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관행을 비난하지 못한 점.

5) 하비타트 II 의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비정부조직의 역할

* 물론 유엔은 하비타트 II 의제와 같은 그러한 문서가 가진 한계를 간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처방과 권고를 지키지 않는 회원국들에게 부과되는 세제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참여한 국가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점이 바로 유엔이 국제회의를 준비하는데, 그리고 회의 이후 각 국가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감시자 및 보고자로서 비정부조직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인 것이다. <즉 비정부조직으로 하여금 유엔회의에서 여러 원칙들에 동의한 각 국가들이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회의의 의제를 이행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비타트 II의 경우 유엔인간정주센터(UNCHS)는 비정부조직 및 CBO를 위해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회의에 참여하여 유엔의 공식적인 인정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리고 그들에게 여론을 형성하고, 지방정부 및 국가회의에 참석하고, 지방 및 국가적 동맹을 형성하고,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와 지속가능한 인간정주를 이루기 위한 그들의 활동을 보고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통해 국가실천계획을 만드는 데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고무시키는 지침서를 마련했다. 그 이전에 나온 유엔인권센터(UNCHR)가 발행한 책자를 보면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비정부조직들이 회원국들의 인권 위반 사례를 유엔에 알릴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비정부조직은 시민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법률 교육, 훈련, 조언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나라에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강제하기 위해서 상황을 감시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UNCHR, 1993: 26-7). UNCHS 의장이면서, 하비타트 II의 주최자인 Wally N'Dow는 하비타트 II NGO 회의의 공식 개회식에서 NGO 대표들에게 연설할 때, NGO에 대한 유엔의 그와 같은 기대를 확실하게 설명했다.

<세계실천계획의 한계는 세계를 적도 없고 어떤 경쟁자도 없는 파트너로 정의하는 것과 같은 이상주의적 관점에 있다.>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세계가 가능한 것인 것처럼 가정해야만 했다. 더 나아가 세계실천계획은 자신의 계획을 특정 국가 및 지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계

획을 특정화시키지 못하고 보편적인 용어로 표현해야만 했다. 따라서 세계실천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의 세계관을 고려하고, 세계실천계획의 사상을 특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지방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이 세계실천계획의 의미와 적용 가능성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세계관을 넓혀 주고 설명해 주는 작업들도 중요하다.

3. 하비타트 의제를 지역주민운동에 적용하기 위한 개념들

하비타트 의제에 대한 분석은 그것을 특정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알맞게 재해석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방의 조직들에게 중요한 특정 이슈를 통합시키고, 하비타트 의제의 세계관과 지역주민들의 공동 관심사의 차이를 연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의제를 지역주민운동에 적용할 때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세력화시키려는 이론들로부터 개념을 차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NGO가 대안적 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세계적 수준의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에 적합한 개념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조직이론의 중요한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자원동원론을 수정하고 문화적 가치를 측정하는 인류학적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자원동원론은 사회운동이 목표로 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인간, 조직, 물질적·문화적 자원들이 그 운동의 편으

로 동원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McCarthy and Zald, 1977: 1213). 그리고 자원동원론은 사회운동에 적합한 이론이지만, 우연히도 복포, 자원 배치, 주요한 행위자들의 역할, 연합과 파트너십, 제도적 변화와 같은 하비타트 의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론 자체만으로 리더십을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방법들이 이론화되는 것도 아니며, 그 이론에 세계관과 같은 개념이 포함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개념들 안에 지도력의 개발, 행위자들간의 비대칭적 관계, 세계관, 주관적 의미와 같은 개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분석들에서 사용되는 기본적 가정과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들>

가정

1. 사회운동조직은 리더십 개발과 지역사회 자생적 조직화를 통해 현재 세계의 모델을 자원 배치와, 행위자들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문제시하고(problematic), 현재의 모델과는 다른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 의미를 달성하기 위한 관계 및 자원 배치를 이루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는 복합적 행위자(개인 및 조직체)이다.

개념 정의

1. 목적: (자원 배분 및 권력관계라는 의미에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일련의 체계. 목적과 하위 목적은 상대적으로 지속가능한 상태라는 복합체, 즉 대안적 세계라는 모델을 형성한다.

2. 행위자: 목적을 설정하고, 의미를 창출하고, 전략을 설정하는 개인 또는 집단

3. 비대칭적 관계: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을 지배하는 데 따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개인 또는 계급, 집단 관계(자원·정보의 흐름,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복종 등을 포함해서)

4. 연합과 파트너십: 몇몇 특정 목적 또는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는 행위자들간의 합의

5. 제도적 변화: 일련의 자원 배분과 권력 관계(비대칭적 관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 그와 같은 일련의 상태는 하나의 "세계", 즉 그 모델이 모든 관련된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세계의 하위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운동조직의 실천계획을 분석하는 방법

① 그 조직들은 현재 세계의 문제를 무엇이 라고 정의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함양하고 있는가?(리더십, 교육)

② 이러한 문제들의 상황적 맥락은 무엇인가? 즉 어떤 자원 배분, 비대칭적 관계, 연합이 이러한 문제들에 수반되고 있으며, 그것들이 유지되도록 하는가?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무슨 자원이 고려되는가?

1) 이러한 문제(예를 들면, 재정)를 가져오는 물질적 자원 및 그에 대한 약속

2) 정보, 지식

3) 노동 — 사람들의 시간, 노력, 그리고 이것을 제공하는 약속 즉 계약, 조직적 세

휴와 같은 "조직적 자원들"

(2) "배분"의 의미는? — 자원 사용 능력, 자원들의 접근 정도

(3) 비대칭적 관계의 의미는?

1)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사람들의 바람이 실현될 개연성. 이는 우선적인 지식, 말하거나 들을 수 있는 능력, 투표권, 강제수단에서의 접근성을 포함한다.

2) 복종: 사람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바람 또는 결정에 명시된 실천을 수행할 개연성.

3) 합법성: 비대칭적 관계의 정당성에 대한 확약

③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의 의미는? 즉 왜 이들 문제들은 그 조직들에게 동기를 주고, 그 구성원들이 행동하도록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의미에 대해 공통적인 이해가 형성되는가?

④ 어떤 일련의 대안적 자원 배분, 비대칭적 관계, 연합을 그 조직의 목적(주로 주요 목적)으로 계획하는가?

⑤ 이러한 목적들이 인지되는 상황적 맥락은? 즉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조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즉 목적 및 하위 목적들의 상호 관련된 복합체인) 대안적 세계의 모델은 어떤 것인가?

⑥ 왜 이러한 대안적 모델이 그들이 현재 인식하고 있는 세계보다 더 나은가? 즉 어떤 의미가 대안적 세계에서는 형성될 수 있는가?

⑦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하는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즉 자원(동원)의 접근, 의사결정과

정에의 참여, 복종, 합법성, 파트너십의 형성, 목적과 세부 목표들간의 예견된 인과관계, 우선 순위라는 측면에서.

1) 세계관의 중요성과 그것을 기록하는 수단

위의 분석에서 살펴 본 것처럼 지속가능한 인간 개발을 이루기 위한 하비타트 의제 및 지역주민의 세계관에 대한 분석은 그 의제를 지역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세계관"이란 정교한 가치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 및 집단의 문화적 자원인 동시에 상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 민족기술지, 현상학에서 이론적으로 발견한 것이다. 주관적이거나 객관적 측면에서 어떤 하나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 세계 안에서 사건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인식한다.

세계실천계획을 지역적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사람들의 객관적 욕구, 법과 같은 제도를 고려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간의 관계, 집단 내부의 동학, 집단간 관계의 맥락을 형성하는 실천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좀 더 객관적이거나 상호 주관적이고, 인지된 사실의 표현뿐만 아니라 주관적 의미의 기록을 용이하게 하는 연구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설명한 하비타트 세계실천계획의 생태학적 관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세계관을 표현하도록 참여자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지역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

은 참여자들이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호주관적 의미를 표현하도록 "중심 주제별 집단토론(focal group research)"이라는 방법과 세계관을 표현하도록 하는 "상황행렬(conditional matrix)" 방법을 사용했다.

2) 연구도구로서의 상황행렬

이러한 종류의 연구에서 주관적 정보와 객관적 정보를 결합하려는 시도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방법론과 유사하다. 인간행위를 실용주의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라는 측면에서 이론적 틀로 정교화한 안셀름 스트라우스(Anselm Strauss)는 메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의미의 상호주관적 생산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연구도구를 개발했다. 이러한 도구 중의 하나가 바로 "상황행렬(conditional matrix)"이다(Strauss, 1993: 60-65).

상황행렬은 행위자들에 의해 채공된 정보를 연구자가 관찰하여 만든 일종의 다이어그램(diagram)이다. 스트라우스는 상황행렬이 참여관찰을 위한 연구도구라고 설명한다. 사건을 관찰할 때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사건의 특정 결과에 영향을 준 특정 행위수준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행위수준이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각 행위수준은 행위의 심리적 또는 문화적 수준, 개인간의 상호작용 수준, 전기·철학·경험 등과 같은 개인적 또는 집합적 수준, 그밖에 제도·지역·국가·국제적 수준을 포함한다. 또한 연구자는 자신의 이론적 틀로부터 각 수준의 상황이 그 결과와

연결되는 점이 무엇인가를 관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여러 다양한 행위수준에 영향을 준 상황에 대한 참석자들의 주관적 견해를 이해하고, 기록해야만 한다. 그러나 동시에 좀 더 객관적인 이론적 실명을 함으로써 이러한 영향을 지적해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실명이 상호주관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만 한다. 연구자들은 어떻게 각 수준과 관련된 조건들이 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경로를 추적해야만 한다. (<그림 1> 참조)

이 연구에는 우리는 상황행렬을 참여관찰이라기보다는 "웍샵(workshop)" 또는 "중심주제별 집단토론(focus group)"에 적용했다. 우리는 참여관찰보다는 "행동 연구(action research)"를 한 것이다. 즉, 우리 연구팀은 집단의 요구를 평가하고, 변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려는 웍샵에 참여자로서 참석했다. 이 연구의 도구으로써 우리는 웍샵 참석자들에게 간단하게 상황행렬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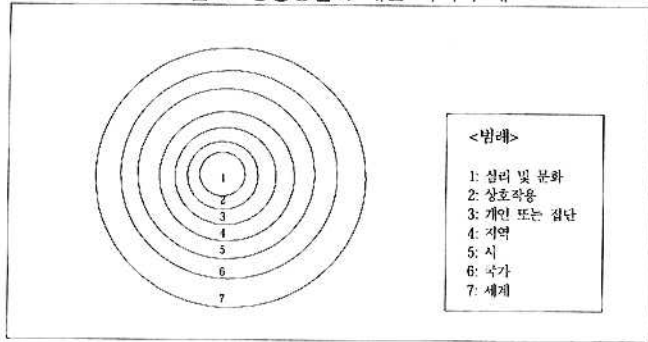
그들에게 상황행렬을 만들기를 원하는 과세할 선택하도록 했다. 따라서 상황행렬은 특정 사건에 대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이 반복되는 사건으로 여기거나 보다 보편적인 사건과 결과로 여기는 것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스트라우스가 상황행렬에서 설명한 방법보다 좀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만들어졌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물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을 회피하거나 책에서 읽은 편에 박은 듯한 고정된 대답을 한다. 따라서 우리 연구자들은 참석자들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웍샵을 시도했는데, 그것은 문제 발생 원인이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상황행렬을 만들 때 그들 자신의 세계관을 투영해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그려낼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3) 중심주제에 대한 집단토론 (Focus Groups)

웍샵에서는 집단토론을 "중심 주제를 집단적으로 토론하는 그룹(포커스 그룹)"으로 나누었

<그림 1> 상황행렬에 대한 하나의 예



하비타트 의제를 한국 주거권운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229

다. 포커스 그룹은 연구자들에 의해 특정화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6명 내지 12명의 사람들로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을 구성한 후 심층면접을 하는 것이다(Hughes and DuMont, 1993: 777). 첫 번째 웍샵에서 집단토론은 활동가와 자신들의 주거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한 동일 공동체 또는 인접 지역에서 온 주민지도자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동질적"이었다. 이들 집단에서 얻은 자료로부터 우리는 그들의 관심사를 보다 조직화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웍샵에서는 주거권에 관심을 가진 집단과 주거권운동에서 같은 수준의 교육과 경험을 한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두 집단이 있었다. 우리는 이들의 대화를 녹음했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만든 대략적인 도형을 수집했고, 이러한 자료를 조직의 실천계획에 우리의 분석틀을 이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분석했다.

4. 주거권운동의 관심사와 이슈에 대한 인식

1) 첫 번째 웍샵을 통해서 본 주민지도자들의 관심사와 문제 인식

1996년 10월 하비타트 의제에서 채택한 '세계실천계획'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지역주민운동 또는 공동체운동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웍샵에는 수도권 지역의 '주거연합' 소속 주민과 주민지도자, 구 단위 주민조직의 주민과 활동가 등이 참여하여,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거권운동이 어떤

행위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웍샵은 하비타트 후속 작업이었는데, 참여자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본 아사카의 "부락해방운동"과 아시아의 주민운동에 대한 기초 발표가 먼저 이루어졌다. 3일 동안의 웍샵을 거쳐 각 지역 주민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 지침을 마련했고, 이를 1997-99년 3개년 동안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연구팀이 이 웍샵에 참여하고 그 토의 내용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그 웍샵의 조별 토론 내용은 이후 발간된 자료집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당해 12월에 발간된 웍샵 자료집을 토대로, 현재 주민운동 지도자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장에서 설명한 개념틀과 실천계획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의식하고 있는 외부 세계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행위자적 입장에서 현 단계 주거권운동이 부딪치고 있는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웍샵의 복적이 정책 방향을 설정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웍샵의 내용과 우리가 채택한 분석 방법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었다. 그렇지만 앞에서 분석한 하비타트 의제의 성격도 정책 방향을 설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비타트 의제와 웍샵의 토론 내용을 비교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웍샵의 토론 내용을 분석할 때 본 연구자는

상호주관적으로 형성된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는데,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두 번째 워싱턴을 진행할 때, 참석자들로부터 이러한 분석 결과의 의미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주민지도자들이 현 상태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대략 다음의 5가지 문제 인식으로 요약하였다.

(1) 재개발지역 세입자의 주거권운동에서 공동체적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 즉 개개인의 '인간성'이 약하다. 따라서 주민들이 서로 단결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만들기'와 같은 역할 훈련이 필요하다.

(2)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주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활동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고 있다. 즉 주민과 활동가간의 관계가 성숙되지 못하고 파괴되어 있어 지역에 뿌리를 박은 운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시민사회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능동적 인식 및 실천이 필요하고, 주민 지도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3) 주민운동조직 자체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일의 계획성,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 따라서 조직 자체가 지속·유지되기 어렵다.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해 재정, 경제, 정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이주단지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장기적인 전망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주민운동조직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4) 활동가들은 사회 전체의 흐름에서 고립되어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고, 주거권에 대한 전문성 또한 약하다. 따라서 앞으로 주거권 운동의 합법화,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사회운동세력과의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주거권운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주된 관건이 될 것이다.

(5) 주거권이 기본적인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또는 도시빈민의 주거불안정은 여전히 심각하다. 따라서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과 한국의 주거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국제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2) 첫 번째 워싱턴에서 나타난 이슈에 대한 분석

이 첫 번째 워싱턴 전에도 주거권운동에서는 이미 그들의 운동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의 보았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의 조직화를 통해서 가수용단지를 요구하고 기기에 거주하게 되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약속한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되면 이미 형성되어 있던 가수용단지의 공동체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쟁으

로부터 시작해 더 나아가서는 지역정지에 참여하는 여러 세력 중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워싱턴 전에도 주거권운동에서 파악하는 투쟁의 이슈는 크게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①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들의 주거권 뿐 아니라 생존권, 교육, 교통, 이웃 사귀 등에 대한 투쟁, ② 빈민이지만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워싱턴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인식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주거문제가 보다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 사회 전반에 설득력있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철거 반대 투쟁 이후의 가시적 성과물인 가이주단지나 공공임대주택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개인주의, 이기심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공동체적 원리 안으로 통합시켜 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강제철거가 행해지고 있고, 도시민들이 열악한 주거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은 그다지 변한 것이 없지만, 주민지도자들이나 활동가들은 기존의 철거 반대 투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연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동의와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따라 주거권운동 내부의 조직화 과제와 외부의 이슈를 파악해야 했지만 이 워싱턴은 조직화 과제를만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그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해당 빈민지역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다양한데, 철거 반대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주

민 단결력이 높지만, 일정 정도 성과물을 얻어낸 이후부터는 갈등과 조직력 약화가 두드러진다. 즉, 외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내·외부간의 갈등 약화가 내부에 잠재해 있던 갈등을 첨예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지도자들의 관심은 강제철거에 어떤 방식으로 대항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보다는 주민들의 세대이기주의가 팽배해 질 때, 이들을 어떻게 조직화해서 운동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지속성에 대한 관심에서 기존의 철거 반대 투쟁이라는 용어 대신 주거권운동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주거권운동으로 발전되어오만 운동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당위론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주민운동 내부의 당위적인 공감대와는 달리 한국 사회의 주거문제를 둘러싼 제반 사회환경 및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연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 즉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주민운동의 전략 변화와 맞물릴 때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 또는 시민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인식론적 차원에서는 주거권운동에 대한 공감대가 주민운동 내부에서 설득력을 얻었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떤 방식들이 실천, 추진되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고, 또 주민지도자들의 주거권에 대한 인식도 제각각 다른 것이 현실이다. 또 현 단계 주거권운동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은 전제계적인 맥락, 그 안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 동 좀 더 거시적인 틀 속에서 조망되

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난 과제들은 놀라울 정도로 경험지 연구에 비해서 이론화된 주민운동조직 이론에서 지적하는 문제와 유사하다. 즉 주민운동(grassroots organizing)은 주민의 이익을 찾는 운동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익을 얻으면 운동의 동기가 떨어진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더 폭넓은 이슈를 파악하도록 해 연대를 맺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주민들간의 이익 차이가 생길 때,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협조를 요구해야 할 때 일치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성 교육과 서로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Mondros and Wilson, 1994: 231-2).

5. 두 번째 뉘샬을 통해서 본 주민들의 세계관

제 2장에서 설명했듯이 하비타트 의제를 지역에 적용하는 데 있어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지역운동단체의 공통적 세계관을 파악해야 한다. 즉, ① 그 운동과 그 지역의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인 지역문화를 알기 위해서, ② 지역주민들에게 하비타트의 생태학적 비전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이 작업은 두 단계로 구분되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참석자들의 현재의 세계관을 표현시키고 기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하비타트의 생태학을 가르침으로써 참가자들의 세계관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첫 번째 단계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면 뉘샬에서 드러난 주거권운동의 활

화, 지속성이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활동가와 주민지도자들의 세계관을 살펴보자.

1) 상황행렬을 작성하는 작업

뉘샬에서는 오전 중에 '상황행렬'이라는 분석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상황에 대한 인지 및 문제 해결 방식을 모색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개발지역의 강제철거'라는 현상이 상황의 층에 따라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고, 각 층별로 어떤 구체적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예로 보여주었다(<표 2> 참조).

이 상황행렬은 간략하고 추상적이었지만 참석자 모두가 강제철거를 오래 동안 항의해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관습이나 문화적 요소를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행위의 유형'이나 '상호작용의 양상'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참석자들의 뉘샬 작업에서는 더 간단한 양식을 사용해서 상황행렬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훈련이 이루어진 후 주민지도자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간단한 상황행렬을 만들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즉 오후의 뉘샬에서는 다음의 두 단계, 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해 자신에게 중요한 과제를 선택하는 단계, 즉 첫째 뉘샬의 자료를 준거로 삼아 연구자들이 부각시킨 5 가지 과제 중 하나를 고르는 단계, ② 선택한 과제에 대해 여러 구체적인 사건을 생각하면서 문제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루어졌다.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조에게

<표 2> '개발지역에서의 강제철거'란 현상의 '상황행렬': 철거당하는 세입자의 관점에서

상황의 층	예	중요한 상황
행위의 유형	위협, 육체적 폭력, 농성, 항의방문, 철거, 범정부의 공고, 행정구역의 공고, 연행, 집회, 시위, 회의, 공동체 놀이 등	[우는 아이만 것을 먹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를 당한다/ 철거민들의 행위는 즉흥적이다/ 철거민의 유일한 힘은 단결이다
상호작용의 양상	노동, 놀이, 싸움, 시비, 노래, 논의, 생각하기, 상상하기, 욕하기, 상징하기, 협상하기, 기도와송배	배반을 자주 당해서 사람을 믿기 힘들다/ 믿이 안통하고, 힘만 통한다/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것이 많다
개인 행위자	세입자, 가옥주, 부기꾼, 철거 강제, 조합의 임원, 건설회사 임원, 경찰, 공무원, 활동가, 종교적 전문가, 이웃, 동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의 대립/ 나쁜 놈들 - 도덕성이 부족한 세상 신뢰성이 부족/ 자부심이 부족 교육이 부족
단체	세입자의 대책위원회, 재개발조합, 철거 용역회사, 건설회사, 철거민을 지원 하는 단체	단결과 불인치의 위기 활판과 침체의 위기 / 꾸준하나 비실비실하나 계획성, 비정강한 정체성 재정적, 정치적 힘에 대한 불공평함/ 부정부패
삶의 현장	수도, 전기, 교통, 치안, 체신, 시장, 주택의 질, 주차문제, 지역의 환경, 상부상조	공무원들에게서 무시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다/ 시민의 권리보다 정부가 특혜를 배분하고 생각하는 것 청소년의 비행 미디어, 오락실 등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 / 여러 가지의 무질서
행정지역 '구'	재개발시행에 대한 결정권, 세입자들의 요구에 대한 결정권, 예산에 대한 결정권, 구 주민 간의 연대	있는 사람들에게 기울어진 공무원 권력과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체
행정지역 '시'	재개발에 대한 계획과 결정권, 재개발 정책을 설정, 연구, 공청회, 시행지침	시청이 주민들에게서 아주 밉다/ 전문가들에게 더 가깝다
국가	주택정책, 다른 정책을 설정, 입법과정, 경찰에 대한 결정권, 국가 이데올로기, 교육정책, 경제정책, 계급현상, 인문계, 사회운동과 제약	권위주의의 지속성 중앙 중심적 상태 농촌의 후진성 주택법 토지의 높은 가격 공안정국 민주화의 과정
세계	강대국의 권력, 한국의 경제발전 역사	민족의 강한 정체성-우리/ 항상 우리 자신을 외국과 비교

간단한 음식을 나누어주었다.

먼저 주민지도자와 활동가들의 세계관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주민지도자와 주거연합 활동가라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두 집단을 구분했다. 이 두 집단간의 차이는 계층적 차이가 아니라 단지 경험의 차이로 대개 활동가들

은 주민지도자들보다 주거권운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더 많다. 활동가들 일부는 지역사회지도자 출신으로 활동가가 된 사람이고, 일부는 대학 출신이지만 지역주민 가운데서 함께 가난하게 살면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 단계로 주거권운동의 지속성을 확

모하기 위한 현 단계의 주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도록 했다. 이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주민지도자들은 교육문제를 지적했고, 주거연합 활동가들은 지역주민 조직화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들에게 선정한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① 누가, 무엇을, ② 왜(이유), ③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3개 범주로 구분하여 기술하게 하였다. 그 다음에 그렇게 분석한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 해결 방법을 ① 누가, 무엇을, ② 어떻게, ③ 나타나야 할 상황이라는 3개 범주로 구분해서 기술하게 하였다. 이 작업에서 작성한 상황행렬을 다음과 같이 사후에 정리했다.

음에 그렇게 분석한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 해결 방법을 ① 누가, 무엇을, ② 어떻게, ③ 나타나야 할 상황이라는 3개 범주로 구분해서 기술하게 하였다. 이 작업에서 작성한 상황행렬을 다음과 같이 사후에 정리했다.

1조 (선택한 주제: 공동체적인 주민조직의 지속)

(1) 문제 발생 원인

누가, 무엇을	왜(이유)	상황
정부, 주거권단체, 주민, 연구소	철거과정에서 가이주단지불 얻어내는 데만 집중했다. 교육이 부족, 주민들 인식이 부족한 상황	일회적인 목표 행위에 많은 역량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적까지는 힘겨운 무경이 필요하기 때문)
정부(평의) 주거권단체와 주민의 지원단체	정책 대인의 부재(실제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력이 부족하다. 주거권에 대한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인식이 맞지 않는 상황(교감 부족), 자기 하는 일들이 너무 바쁘고, 사람이 부족하다.
정부, 주민	주민조직의 힘이 커져 정치력이 커지면, 중앙정부에도 압력 가능. 반정부세력의 힘이 커질 수 있기 때문.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유지시키기 위해, 독점세력의 이해를 유지시키기 위해, (신성장 후분배) 변화되는 사회에 대한 인식의 부족, 공동체를 통해 잘 살아갈 자신이 없다. 산업사회에 대한 피해의식(예배의식), 희생정신의 부족, 자기 자신의 변화를 추동하려는 의지 부족, 명과 집을 많이 가지려는 소유욕이 크다. 의타심이 크다.	올바로 (민주화한) 정부가 아니기 때문.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의지도 없기 때문(세벌 중심의 정책) 삶이 너무 팍팍하다. 너무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다.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이 개인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로 변화되는 상황. 철거 투쟁 과정에서 정신력을 잃어 버림.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전망을 주지 못했다. 주민들의 상황에(저지대) 적합한 다양한 층위에 맞는 교육이 부재.
주거권운동단체	불을 끄려고는 했는데, 불이 나는 원인과 근본적 대책에 대한 연구 부족. 단체 내부의 지속성 부족. 지역에서 문제를 풀이 나가는 과정의 문제(주민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 조직이기주의, 성립되지 않은 이념, 철학 → 불신 반응 → 조직의 한계를 봄, 지도력이 부족.	전문가집단이 없다(전문성이 없다). 소망관의 수가 작다. 예산의 부족. 주거연합 실무자의 개인적 전망 부족. 지도력을 담보할 만한 자원이 없다(경제문제 등)
외부지원세력 개별	현장조직과 엘리트가 동화되지 않는다. 미리만 있고 손발이 없다. 현장성이 부족하다. 활동가와 주민들간의 관심의 차이	전문가, 교수 등이 주를 이루기 때문(말(사)과 행동이 통일되지 않는 상황) 활동가들의 성과 위주의 사고(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활동가들의 경제적 문제, 어려움.

(2) 문제 해결 방법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상황
정부	인식의 변화: 시혜적 차원 → 실질적인 대화창구 마련. 권위주의의 청산. 변화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민생의 전환) → 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반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해야 한다. 제도를 변화시킨다. (주민조직에 대한 조건없는 지원),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 부여, 주민조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도록 한다. → 편향적 시각을 없앤다. 위원회(민간이 다수 참여하는)의 구성 등을 통해	
주민	주민들의 자기상황에 대한 감증 → 사회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교육을 강화, 주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 필요 → 이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력 해결, 서로에 대한 동지적 애정과 관심 필요 → 예. 상부상조	
주거권단체	일상생활을 통한 노력 필요(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슈를 중심으로 공동체적인 활동 필요), 개인의 문제를 조직의 문제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조직이 개인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만든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무궁무진한 것이다)를 개인의 문제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 → 자주 건의하게 하고 만나게 해야 한다 → 이를 위한 정책력 필요(정책 대안 제시 능력) → 정책력을 키워야 한다. 주민들의 실질적 삶을 알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야 한다.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배려에 투자해야 한다. 외부와 연대하여 장·단기적인 체계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전문가집단과 지속적으로 밀착하여 연대해야 한다)	
외부지원세력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주민조직에 참여해야 한다. 머리만이 아니라 손과 발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조직과 힘을 합쳐야 한다.	

2조(선택한 주제: 교육)

(1) 문제 발생 원인

누가 무엇을	왜(이유)	상황
주민들의 수동적 태도	· 임원들을 경시하고 외부강사들을 존경하지만 교육내용이 생활과 멀다 · 권리무생활 때 주민들 자기 개인권리만 찾고자 한다 · 서로 감정을 드러내고 남밖에 자기 자신을 드러 내지 않으려고 한다 · 근시안적 교육내용: 무생 강조(전략·전술)	· 세대위 설립시 자발성 결여의 문제 · 교육자의 수가 단일화·제한적 · 교육자의 교육내용(말)과 피교육자의 삶이 동떨어짐
상근활동가와 주민과의 관계	· 주민입장: 활동가의 개념 불명확, 활동가에 대한 좋지 못한 의구심(복직, 돈 등), 환율을 모름 · 활동가: 주민들의 생계문제 고려하지 않음. 전문 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받지 못함 → 신분과 경 험에 의한 접근	· 활동가를 빨갱이·붉은분자 → 반강이 태움되기 · 의도적인 활동가들의 교육에 대한 정 부의 배타적 견제, 방해 등
강사(교육)	· 지역과 주민들의 현실적인 삶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 과거 경험과 과거 문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교육	· 적절(현장)하게 준비(기술적)된 강사가 많지 않다. · 사전에 섭외하지 못함: 답하게, 상황에
자료 정보 활용하지 못함	·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가 많지 않고, 자료화시키 지 못함 ※ 공부의 상황: 재정지원 부족	· 한국도시연구소 현장성 상실

(2) 문제 해결 방법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상황
· 정보교육원(주거연합, 주민연대, 도민위 등) → 강사교육, 훈련	· 정보교육원과 지역의 밀접한 관계, 잦은 교류 → 교육지역과 주민에 대한 사전 파악 · 강사: 현실적인 문제로의 접근과 대안적 교육	
· 교육받는 사람 자체 평가, 분석 을 통한 체계화	· 주민총회교육 → 회원들의 반응 익기 → 임원들 평가 → 지역화시키기(대안적, 계획적) · 정보교육원 틀 활용 → 교육훈련 안에서 · 지역내 여론조사	
· 임원교육, 주민교육	· 정보교육원 → 공동체적 삶 중시한 대안, 미래지 향적 · 세계발 과정의 투쟁교육, 인성교육 → 주거연합 또는 지구별	

2) 워싱턴 참석자의 세계관

제 2장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 중에 일부는 '나는 실명이 가능한 하나의 세계 안에 살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가능한 실명'이 대개 예매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미래의 행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행위의 결과를 상상할 수 있도록 그들의 세계관을 반영토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워싱턴에서 작성된 상황행렬 들은 그것을 작성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계관 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먼저, 연구자들이 사용한 도구와 방법을 평가하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원래 상황 행렬은 구체적인 한 사건에 대해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문제 발생 원인, 즉 한 종류의 사건들을 보편 적으로 설명하는 상황행렬을 만들어 보았다. 이 때문에 제 1조가 선택한 매우 보편적인 과 제에 대한 이유와 상황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 과 세계의 상황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상황행렬을 만드는 작업도 끝이 없었 다. 그리고 두 조 모두가 문제 해결 방법에 해 당되는 상황을 잘 상상할 수 없었던 것도 구체 적인 사건을 두고 상황행렬을 만들지 못한 탓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참석자들이 이러 한 상황을 가정하고, 상상해 보는 세계관이 약 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다음으로 이 상황행렬들을 하비타트 의제의 '파트너십' 전술과 비교해 보면 이들은 자기 조

직과 이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관 중심으로 사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와 기 업체에 대한 인식도 간간히 드러내고 있다. 다 만 제 2조는 문제 해결 방법에서 주민조직과 비정부기관밖에 생각하지 못했다.

각 조가 선택한 과제는 그들이 매일 매일 경험하는 세계를 반영한다. 먼저 선정된 과제를 보면 주거연합 활동가로서 지역사회를 돌아 다니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자리로서 자 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마다보도록 교육하러 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지역주민 조직화를 주된 문제로 삼는 반면, 지역현장 속에서 활동 하는 주민지도자들은 주민교육을 주된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 람들은 지역과 밀착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는 반면 주거권운동단체의 실무자들은 보편적인 목적을 중시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서 지역주민들이 조직화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 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하비타트 의제의 생태학과 워싱턴 참 석자의 '생태계의 경계선'을 비교할 수 있다. 주거연합 실무자들은 자신들 개인, 주거권 관 련 단체, 삶의 현장의 특성, 국가에 대한 인식 은 분명하나 세계적 수준에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시' 또는 '구'라는 행 정지역을 단위로 하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80년 대 국기와 서울시가 세계발 및 철거과정에서 그 성격 차이가 거의 없었던 시대에는 국가와 서울시의 구분이 의미가 없었지만, 91년부터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계기로 '시' 나 '구'의 자율적인 행정력이 그 이전 시기보다

약간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시나' '구'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 녹색당의 슬로건이었던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국지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전략의 UN 차원에서의 추진과 이것이 한국의 주거권운동과 맺는 관계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주거권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전략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이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략적 행위에 대한 인식은 아직 주거연합 활동가들에게 내재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주민지도자들의 교육에 대한 상황인지를 보면 이들은 개인, 단체, 삶의 현장의 특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나 이를 좀 더 넓은 수준 안에서 분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주거권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지역간의 연대 강화를 주장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 지역간의 정보교류가 거의 없으며, 주민조직간의 경쟁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민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지도자 자신들에 대한 전문적인 재교육이 시급히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위의 간단한 상황행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활동가나 지역주민지도자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나 이를 좀 더 전지구적 차원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집단 중에서도 특히 지역과 밀착되어 활동하는 주민지도자들이 조직 운영 자체의 열악함 때문인지 활동가와 시각의 폭이 차이가 나고 좀 더 시안

중심적임을 알 수 있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국지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대원칙, 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 체제 속에서 지역주민운동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지만, 엔가티(Angotti, 1993: 229)가 지적하듯이 실제 지역현장에서는 그런 원칙 하에 무슨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지 막막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제 구체적인 장(site)에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주민운동 나름대로의 실천 전략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6. 요약과 결론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비타트의 제를 한국의 주민운동, 특히 주거권 운동에 적용하기 위해서 주거권운동을 하는 사람들간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대화의 첫 마당에서 하비타트의 정신을 따르는 사회운동의 국제적 차원에 대한 설명을 들은 참석자들은 그들의 관심사를 표현하면서 3개년의 실천계획을 만들었다. 연구자들은 주관적 의미를 고려하는 사회운동이론과 지역사회개발 이론을 적용해서 주거권운동의 과제를 지적했다.

대화의 둘째 마당에서 상황행렬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참석자들은 상황행렬을 작성했고, 연구자들은 이 자료에 기초해서 참석자들의 세계관을 분석하고 이를 하비타트 의제의 생태학과 비교했다.

이 연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하비타트 의제에서 '대안적 개발'의 생태학을 표현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세력화'를 권하고 있지만, 세력화를 위해 요구되는 이슈나 쟁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의제를 지역에 적용할 때에는 그 지역의 가난한 주민들의 '세력을 얻기 위한 이슈가 무엇인지 유의해야 한다.

② 하비타트 의제를 지역에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 하비타트 의제의 생태학과 지역주민의 세계관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비교 과정은 주민의 세계관을 표현시키고 기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주민들의 세계관을 발전시키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이다. 이 연구에서는 단지 첫 번째 단계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계관이 표현되도록 하는 작업을 할 때, 상황행렬을 워킹 (즉, "중심주제에 대한 집단토론(focus group)")을 통해 작성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너무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것보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③ 이 연구과정에 참석한 주민과 활동가들은 하비타트 의제의 '파트너십' 상황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 세계관의 미미한 점으로 인해 지방정부, 기업체, 국제 차원의 관계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과제를 설정하고 '이슈를 만드는 데 있어 자기 조직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있지만, '세력화를 위한 이슈'로는 단지 기수용단지의 확보와 공공임대주택 관리에의 참여로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가난한 이들의 세력화'라는 목적에 여전히 보편성이 부족함

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부족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① 워킹 참석자의 세계관을 사후에 분석한 것으로 상황행렬 방법을 참석한 사람들의 세계관을 발전시키는 데에 사용하지 못했다. 충분한 시간(예를 들면, 2박 3일)이 마련된다면, 방법을 설명하고 구체적 사건의 상황행렬을 작성하여 더 보편적 상황행렬 작성, 세계관 분석, 세계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 등 모든 단계를 밟아 나가 상황행렬 방법을 더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주거권운동에 한정해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도출된 결론을 일반화시킬 수 없었다. 하비타트 의제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의제와 관련된 환경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사회복지사업, 지방정부, 비정부기관, 기업체 등 다양한 단체의 구성원들과 이를 함께 적용해 보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참고 문헌 >

- 박문수, 1996.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하비타트 Global Plan of Action 분석", 『도시연구』, 제 2호.
- 한국도시연구소 역, 1997. 『하비타트 의제와 이슬람 불 전언』.
- Angotti, Thomas, 1993. *Metropolis 2000*. Routledge.
- Friedmann, John, 1992. *Empowerment: The Politics of Alternative Development*. Blackwell.

철암 프로젝트 사례1)

- 사회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소지역 회생의 공간사회학적 접근의 중요성 -

주대관(철암세상 대표)

1. 철암의 도시변동과 공간사회학적 제 문제들

철암은 강원도 태백시 삼출짜기에 있는 탄광마을이다. 철암은 1990년대 말 강성탄광에서 채굴한 석탄 반출을 위하여 목호항과 철암을

1) 철암프로젝트: 1999년 제창지역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의 지역회생 문제를 조사·연구 하고자 12인의 건축가들이 모여 민들이권 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의 작업 진반을 떠나는 것으로서, 작업팀의 작업은 철암이라는 소지역에 대한 집중력이며 실험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본과 하드웨어 위주의 기존의 개발방식과는 다른, 지역성과 문화라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새로운 지역회생 방식을 통해 소지역의 회생대안을 찾는 데 특징이 있다. 작업팀의 작업은 교육과 문화와 도시경비로 나누어지며, 2002년에는 지역의 시민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철암세상이라는 협의체 형식의 단체를 설립하여 더 넓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3년 4월에는 그간의 활동결과를 정리한 「철암세상」을 발간하였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강원도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철암을 지역성과 문화예술에 기초한 강원 남부권 보편적 개발의 허브로 설정하여 지원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있는 철도가 가설되면서 탄광도시로 형성되었다. 1950년대 내륙 철도가 연결된 이후 강원산림과 그 밖의 많은 군소탄광이 개발되어 1970년대의 두 차례 오일쇼크와 함께 석탄산림이 최대호황을 누리면서 1990년대 중반 도시규모는 정점에 이른다. 그러나 1989년, 석탄산림의 사양화에 따른 국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이후 대부분의 군소탄광들이 정리되고 1993년에는 철암최대의 탄광이었던 강원산림이 폐광하면서 도시는 점점 쇠퇴하여 전성기 때에는 3만 명에 이르던 인구는 현재 4,500 명이 채 되지 않고 존립이 어려운 마을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제활동이 죽어버린 철암에 그래도 남아 있는 이들은 철암이 고향이고 정이 들대로 들어버린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청년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떠나버린 철암에서, 학교들마저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들과, 철암살이가 남부끄러운 아이들이 서로 잡아끌며 철암을 떠난다. 이제 철암을 떠날 수 없는 이들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만이 남아 있는 철암에는 오랫동안 관리지 않아서 향여만 가는 석탄과 그 폐석만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처참함이 높아지는 만큼 짐들은 하나 둘 헐리고 있다. 떠난 이들이 살던 집들은 빈집으로 버려지고, 헐리고, 개점이 되어 버렸다.

철암이 건축도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학문적 과제를 던지고 건축가들에게 작업의 과제를 던진다면 그것은, 개발된 지 5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도시가 다시 해체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석탄이라고 하는 산업적 요인에 의해 도시가 형성되었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자 그 효용가치를 다하고 도시가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철암은 소지역내에서 다차원의 도시변동이 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하곡지역에 자리 잡은 철암은 철암천과 그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여러 개의 마을로 되어 있는데, 철암 역주변과 상철암, 그리고 들꾸지와 동점동 등의 소지역들은 하나의 생활권이면서도 폐

광과의 관계, 구성원의 유입 특성 및 경제활동 특성, 그리고 히드웨어의 건설함의 차이에 따라 각각 도시변동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되지도 아니한 지역, 완전히 소멸한 지역, 도시변동이 완료되어 안정된 지역 등으로 구별된다. 아직까지 도시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주로 폐광을 겪지 아니한 지역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반면, 도시변동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외지의 저소득층이 유입되고 기존 거주민들과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형성하고 있다. 상행위에 종사하는 이거나 단광종사자는 여남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생산활동 인구비율이 낮고 저소득층 및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소지역별 주민들의 생산활동 공간의 차이와 그에 따른 지역에 대한 애착도의 차이, 청소년수와 가정환경의 차이, 그에 따른 교육적인 문제, 식단에 의해 심어진 관 의존 심리 등 많은 문제를 품고 있으며, 이러한 계층적인 차이는 좁은 지역 내부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의 차이로 연결되어 소지역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제조직 등의 성행으로 인한 수많은 사조직, 유입에 의해 구성된 인구학적 특성과 출신지역과 거주기간에 따른 밋세, 도시계획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성향에 따른 차이 등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회적 커들이 무수히 겹쳐지고 얽혀 있어서 경제적인 희생만으로는 통합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철암공간의 급격한 팽창과 소멸이라는 시간적인 문제와 다차원화된 도시변동에 따른 공간사회학적 문제들은 철암에 대한 도시계획 문제의 개선에 대하여도 기존의 일반적인 갖대를 적용하는

2) 철암의 외지 유입주민의 경우 역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가 많다. 그들 대부분이 역내의 경제활동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의 임대료가 저렴하여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이 매우 위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유사한 시기에 대한주변공사가 지은 서로 다른 지역의 5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계층이 동일지역의 단독주거에 거주하는 계층에 비해 한 지역에서는 더욱 가난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형편이 훨씬 낫다. 생활권 중심지의 주택들은 대부분 초기에 지어진 것이어서 외곽지역의 주택에 비하여 훨씬 열악하여 독거노인들이 주로 거주하며, 전변을 무단 점유한 이들은 2002년의 큰 수해로 유실된 자리에 행정관청의 묵인하에 다시 집을 지었다가 그 자리에서 2003년 다시 큰 수해를 입어서 모두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부분이 경사지인 절거된 절터들 위로는 불요불급한 도로계획선이 그어져서 보상을 바라는 이들의 투기를 조장하며, 그 때문에 수해민을 이주시킬 부지의 땅값은 엄청나게 뛰어 오른 상태이다.

더구나 지역전체의 도시변동은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어서,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한번 석공의 폐광을 맞아야 하며, 도심을 대부분 파괴하게 될 도로확장과 수해방지를 위한 하천 확장과 그에 따른 천변건물들의 철거라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떠나가고 있는 지역에 몇몇의 상인들과 이주 보상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0~30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계획되고 시장계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사복과 고판에는 전당포와 음식점이라도 있지만, 철암에는 평민 아파트와 계건축된 평민 시장만이 있는 유형의 도시가 세워질 지도 모른다.

2. 경제정책의 부재와 지역성을 담보하는 전략적 도시경비

철암지역의 초기에는 주로 현황조사에 집중되어 2000년 4월에는 도시건설과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간략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01년 2월과 9월에는 작업팀

참여건축가들의 제안을 담아 2차례의 작업발표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2001년 7월에는 35명의 자원봉사 학생들과 함께 도시전체의 건물현황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철거지도를 작성하고 지역의 현실과 맞지 않는 도시계획의 조정을 포함한 도시구조재편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으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철암은 왜 회생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경제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의 건축도시작업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었다.

◀ 우선 앞선 논제에 대하여 '과거에 자연이었고 이제 그 용도를 다하였다면 다시 자연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철암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철암'을 더 중시해야 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후자의 논제에 대하여는 '경제적인 대책의 수립을 기다릴 수가 없고, 경제적인 대책이 수립된다고 하여도 그 실행은 도시의 회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관련 타분야 전문가집단과의 협력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국내에서 선례가 전무한 시도였던 경과 작업의 성격에 따른 한계의 결과였다.

철암에 대한 경제적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간에 태백시가 추진해왔던 철암에 대한 경제적 대안은 강원산업의 사택들이 밀집해 있었고 이제는 빈터가 되어버린 돌구지 8만여 평에 태백을 대표하는 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야심찬 것이었다. 그러나 그 추진은 제방대책의 일환으로 많은 자원이 예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산업단지로서의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간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었다. 태백시의 추진과 주민들의 희망어린 믿음은 시간만이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었다.))

3) 그 사이에 돌구지에 새로운 공장의 유치는 전무하며 2002년에는 도시계획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2000년 10월에 1차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2001년 2월과 9월에는 1, 2차 발표 및 전시회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철암회생이 단지 공장유치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역성과 문화와 교육문제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맞는 최적의 하드웨어를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게 된다.

우리의 이러한 인식에는 공장유치를 통한 철암회생이 실제로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비단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철암은 수도권에서는 5시간이 걸리는 거의 오지에 가까운 곳이며 주택은 13평 아파트가 전부로, 공장유치를 위한 땅과 지원금 이외에는 종사자들의 거주 조건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철암에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오지 많은 은마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장유치와 같은 총량적 경제학과 더불어, 저기능의 주민들, 떠날 수 없는 이들에게 적지않은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제안은 그러한 사회학적인 문제를 고려한 경제대책으로 공장보다는 수공업을 권장하였고, 이를 위한 교육적 인프라의 구축, 석탄 산업유산의 보존활용을 통한 장소 마케팅과의 연계, 기존시설의 리모델링과 교육문화적 서비스의 제고를 통한 거주인구의 유인 등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4)

이렇듯 지역성의 문제는 철암이 급격한 도시변동을 겪고 있고 이제 새로운 미래상을 그려야 함에 있어서 50여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이 변경되어 일반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완화되었고 소병안권태과 크를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간에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4) 우리의 작업에 대한 주민들과 태백시의 반응은 냉담한 것이었다. 우리의 제안이 관주도의 경제논리에만 익숙하고 장기간의 어려움으로 관 의론적인 심리가 이미 크게 자리잡고 있는 점, 그리고 철암작업이 행정관청과는 무관해서 행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타 지역과는 변별성이 뚜렷한 도시역사와 그곳에 배어 있는 삶의 기억을 연속시키는 문제로서 사실상 어떠한 도시에서라도 도시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특히 철암에서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철암지역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설정된 것이다.

그것은, 저탄광과 경석강, 철암역의 신탄시설과 같은 석탄관련시설들, 폐가와 하천변의 상가와 같은 남루한 건물들과 같은, 지금까지 철암지역 내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요소들을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한 석탄산업의 호황기까지 훼손되어오고 이제는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자연환경을 복원함으로써 인공환경과 자연환경이 함께 만들어내는 철암만의 독특한 풍광과 기록된 시간을 철암희생의 자원으로 재인식하고 지역희생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다.⁵⁾

결국 지역성을 담보하는 개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도로를 넓히고 공장을 유치하는 기존의 방식, 그러나 실현 불가능한 개발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도시정비의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도시계획의 결정·집행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철암의 지역성을 지키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시설의 철거를 막고 그 시설을 조사하여 재활용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주민들과 택시의 철암에 대한

- 5) 이를 위하여 우리는 빌리지움(village museum, village museum)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빌리지움이란 이미 널리 알려진 에코뮤지움(ecomuseum)이라는 개념과 유사하지만, 그것이 "확장된 의미의, 또는 "환경과 조화됨" 등 여러 가지로 설명됨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적 관심이 중심개념인 반면 빌리지움은 에코뮤지움의 이론에 동의하면서도 일상의 연속이라는 측면을 더 중시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에코뮤지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도하게 투어리즘과 결합한 피쳐레스크한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논의와 비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6) 여타의 보존 개발에서와 같이 '철거를 막는 일'이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비어있고 철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래상이 기존의 개발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가 도시계획의 집행으로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철암역앞의 철암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문제를 들 수 있는데, 1980년대의 거리중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상가유적'이 모두 그곳에 있고 그 건물들이 철암의 상가건물들이기 때문에, 도로확장시에는 경관적 측면에서의 지역성은 물론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달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성을 담보하는 도시정비를 위하여 우리는 도시계획의 변경과 불요불급한 도로의 폐지, 그리고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맞는 계획을 제안하고 1980년대의 기준에 맞추어 지어져서 이제는 그 효용성이 나쁜 시설들, 예컨대 모두 13평형으로 비좁아서 주민이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현석탄공사 소유의 상철암주공아파트(800세대)와 옛 강원산업 소유의 동원주공아파트(300세대)를 단위세대면적을 넓히는 리모델링을 하여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적 사업으로 2002년과 2003년 여름에는 독거노인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집짓기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실시하고⁶⁾, 2002년 10월에서 12월까지 석 달 동안

- 그것은 건물과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상충되는 일이다.
- 7) 2002년에는 5동, 각 동 13평내외의 독거노인주택을 사실상 절가 신축하였다. 중사는 권속가들과 권속과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권속가 5인, 학생 800인) 역내의 단체와 개인이 이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사비는 석비포함 평당 60만원내외가 소요되었으며 전액 모금으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금액은 헤비타드 주택이 사실상 평당 100만원에 분양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수치이다. 그러나 무료공급에 따른 주민들간의 갈등이 문제로 드러나 2003년에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평당 45만원을 자부담시켰으며, 그 결과 2호를 신축하는 데에 그것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훨씬 개선되었다(권속가 5인, 학생 연인원 900여명 참여).
 - 8) 철암에서 집짓기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 외에도 권속의 노후로 그들이

지역시민운동단체와 힘을 합쳐서 저소득 주택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2002년에는 철암역 선담장이 등록문화재(21호)로 등록되고 강원산업 합숙소 건물이 지역주민의 손에 인수되었으며 철암로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도로계획이 폐지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2002년과 2003년의 수해 이후 지역에서는 수해에 관중한 개발 주장이 커다란 힘을 얻고 있어서 철암로의 확장과 기존 주거 철거지에 대한 또 다른 대규모 임대아파트의 건설, 그리고 철암시장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철암은 이제 존재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철암작업 역시 그와 같다.

그러한 계획들이 실행될 경우 철암의 대부분의 기반시설은 철거되고 보상을 받은 주민들은 떠나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이 지어지게 될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2001년에 준공한 기존의 임대아파트조차도 저소득층에게는 관리비가 파다하여 상당수가 비어 있으며, 철암바깥의 주민들은 황지지역의 아파트 공급 과잉과 객관적 주거조건에 비교 열위 때문에 전혀 진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탄광지역주민의 주택과 관련된 비소유 습성 등으로 인해, 거주를 위한 교육 문화적 환경을 현저히 개선하는 특단의 조치가 없이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만으로 지역회생

떠나가면 될거릴 수밖에 없는 주거를 지켜냄으로써 그들이 떠나더라도 또 다른 가족이 철암에 들어와 살게 하고 경차 관광이 활성화될 경우 민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광베이스를 확충하는 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보호수급대상자들인 노인들에게 약간의 경제적 보탬이 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집짓기를 통하여 철암의 지역성을 이어가는 것이다. 즉 대상주택건설을 기존 주거밀집지역에 한정하고 기존주거의 유희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재료와 질감을 지킴으로써 기존 주거지의 유산과 가치를 지속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을 기대하는 것은 짐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철암이 두 번의 수해를 기점으로 이렇듯 폐광 이후 최대의 변화점을 맞고 있는 것은 철암의 문제를 단순히 석탄산업의 사양화라는 국지적이고 경제적 요인의 문제로만 보는 데에도 기인한다.

철암의 문제는 어쩌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나라의 소지역 대부분이 겪고 있고 겪게 될 문제인지도 모른다. 태백이 폐광을 맞이하고 고원관광휴양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붕괴된 지역경제에 대한 대체산업의 차원이나, 석탄과 관광의 산업적 분류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이른바 산업시대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암문제 역시 경제적인 요인을 넘어서 사회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컴퓨터-디지털-인터넷에 의한 생산-문화-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의 시대이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과 문화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는 전통적인 산업을 폐기할 뿐만 아니라 그 종사자들조차도 쓸모 없게 만든다. 새로운 문명이 가져오는 변화가 철암이 겪었던 갑작스런 폐광의 그것처럼 너무나 급격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변화와는 그 차원에서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암의 문제는 석탄을 같은 화석연료인 기름이나 개스로 바꾸고, 광산업을 공장으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그것은 화석연료를 태양열이나 풍력에너지로 바꾸는 변화이며, 평산터에 카지노와 경전장을 만드는 것과 같은 변화의 문제이다. 그것은 수송할 화차가 모자라서 역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고 독재자가 전폭적으로 정략적 배려를 하는 그런 산업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시커멓고 무뚝뚝한 얼굴을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 가득한 얼굴로 바꾸는 일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상품을 만드는 일보다 파는 일이 중요하다. 공장이 대리점을 통제하던 시스템이 아니라 판매상들이 생산자

를 거느리는 시스템이며, 제품의 품질보다도 회사의 이미지가 더 높은 값을 받는 조건이 된다.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싶어도, 세계무역질서라는 강자 앞에서 사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일자리 3,000개짜리 대기업을 유치해서 태백을 먹여 살리라고 베풀 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부지를 값싸게 제공하고 세금을 몇 년씩 감면한다고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다. 공장이 이전해도 공장종사자들이 따라가지 않으며, 공장종사자들이 공장근처에 살지도 않으며, 과거처럼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산골짜기로 몰려들지도 않는다.

3. 사회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하드웨어로서의 도시

철암에서 보여지는 커다란 변화는 사회전반의 정치·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린 것이다. 그리고 그 하드웨어로서의 도시에 작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첫째, 새로운 패러다임은 생산공간과 소비공간과 주거공간의 공간적 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자동차와 인터넷문화가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확장하고 경제를 광역화하기 때문이다. 생산공간과 주거공간 간의 관계는 이전의 그것과 사뭇 달라서, 주거공간이 생산공간과 물리적으로 더 멀어져도 무방하며, 그 반대로 주거공간이 생산공간과 통합되기도 한다. 양자 모두 직장과 집사이의 쉼 만큼의 거리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 생산공간의 광역화는 생산공간 자체가 광역화된다기보다는 생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생산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주근접이 해체되는 반면 주거공간은 집중화된다. 주거환경이 더 나은 곳으로 사람들이 집중되는 것이다. 산업시대의 사람들이 생산공간으로 이동하였다면 이제는 모두 소비공간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모든 것은 도시, 더 큰 도시에 집중되

고 소지역은 점점 더 소외된다.

△ 둘째,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는 도시의 하드웨어들조차도 오로지 그 경제적 효용성에 의해서만 가치가 판단된다. 새로운 시대는 지난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람과 건축물과 도시에 던짐으로써, 그들을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낡은 산업의 대체는 낡은 사람의 대체를 부르며 낡은 도시를 폐기한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공간은 모두 소비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공간이 낡은 것이라면 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며, 권원의 의미를 자연환경 그 자체로 보지 않는다. 그곳은 공장생산과 식도락과 레저가 행해지는 또 다른 경제생산과 소비공간일 뿐이다. 사람들은 도시바깥에서 생활활동을 하면서도 도시, 더 큰 도시 안에서 문화와 교육을 소비(하고 싶어)한다.

경제적 효용성은 자본의 이익에 하드웨어가 어떻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판단된다. 그렇지만 사람과 건축물과 도시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못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모든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자본의 이용주구적 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이 땅 이 시대에, 철암과 같이 산업시대의 마지막 시기인 1980년대에 경지한 도시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9) 여타의 지방 소지역들의 경우도 철암과 다르지 않다.

9) 그렇기에 철암이, 태백이, 아드메이에의 투기가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으로 믿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일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새로운 패러다임 밖으로 몰아내는 일일 것이다. 얼마 전까지 철암의 광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대현주백공사의 13평 아파트는 이제 4인 가족의 생활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 광부들이 짓고 그들의 딸과 현승이 배인 집들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어서 버려지고 철거되고 있다. 광업소 앞의 좁은 공간에 몰려있던 모든 시설들은 이제 새로운 공간을 찾아 옮겨지고 있다.

△ 셋째, 새로운 환경에서 경제적인 동인 만큼 중요한 것이 거주자의 삶의 질이다. 오히려 삶의 질에 대한 보장이 경제를 유인하고 가치를 정의한다. 그리고 삶의 질은 주거문제와 같은 공간적 측면과 문화와 교육이라는 도시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요약된다. 도시와 건축의 문제가 이제 단순히 단일건물의 미관이나 교통의 편리함과 같은 하드웨어만의 문제를 넘어서 문화와 교육이라는 새로운 소비양태와의 관계 속에서 그 가치가 정의된다.

철암과 같은 소지역에서 인구이탈의 주요한 원인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가족이 제대로 살만한 집과 문화적 혜택이 부족하고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데에 기인한다. 즉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고 물리적 쾌적성을 높이는 등의 도시계획행위, 도시를 계량적 공학의 대상으로만 보는 계획은 이제 소지역에서는 차선의 행위가 되었다.¹⁰⁾¹¹⁾¹²⁾

10) 철암의 학생수 변동 추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3
철암초등학교	260	240	229	206
철암중학교	160	155	119	114
철암고등학교	48	26	36	36
학생수합계	468	421	384	356
철암동인구	4,863	4,603	4,372	4,130
학생/인구비율	9.62%	9.15%	8.78	8.18%
동철초등학교	78	72	72	83

- 11) 이러한 인식의 실천으로 우리는 2002년 2월에 작업팀과 뜻을 함께 하게 된 초형예술작업팀 할아택과 공동으로 철암역에 철암역갤러리를 설치하여 매일 새로운 전시를 기획 운영하고, 지역의 관광문화적인 토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7월달에 철암예술축제를 기획하여 주민주도하에 치러지도록 도왔다. 또한 2003년 4월에는 철암복지회관 옆 주차장에 야외 탈착식 대형스크린대를 학생공모를 통해 디자인하여 태백시에서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문화행사를 수시로 열 수 있도록 하였다.
- 12) 또한 주민이탈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철암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여러 단계와 협력하여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하

△ 넷째, 새로운 공간환경은 총량적 경제지표의 상승이라는 공간정치의 의해서만 결정된다. 시장 만능주의와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의 진전이 결탁하여 만들어 내는 대부분의 지역개발의 청사진은 소지역의 거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대안이 되기보다는 소지역의 권력을 독점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기가 쉽다. 공간과 관련된 자들의 공간소비의 특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간의 정치가만이 선거의 승리자가 되고, 공간을 직접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들의 원본적인 발언이 막강한 힘을 가진다. 이제 더 이상 학교는 진정한 의미의 시설이 아니며, 학문으로 포장된 공간소비의 한 영역일 뿐이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은 절차의 복잡화를 통한 공간생산 과정의 특점의 기도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태백지역에서도 지역간 균형개발이 시정목표의 1번이지만, 모든 문화시설과 폐광대책 차원의 투자는 시장이 소개하고 유권자가 밀집된 황지지역에만 집중되고 있고, 새로운 아파트들 역시 황지에만 지어지고 있으며, 권력은 황지지역에 의해 독점되고 있어서, 철암주민들 역시 지역에 대한 자긍심보다는 자식들을 황지권력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아이들을 유치원부터 황지로 보내고 있으며 철암의 아이들과

고 있다. 2002학년도 1학기부터 철암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나는 권육교실' 프로그램은 정규수업으로 편성하였으며(2002년: 총 13회, 회당 4교시, 총 52교시), 2003년에는 권육교실에 더하여 환경교실과, 사권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환경교실: 연 9회, 회당 4교시, 연 36교시, 권육·사권교실: 연 15회, 회당 4교시, 연 64교시)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암초등학교의 학생수는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그리고 철암이 교육문제를 지역의 운명라 동일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며, 교육당국은 그들대로 새로운 교육의 시도를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이며 지역사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에는 모두 힘이 없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실행을 협의하였으나 계획의 위기 앞에서도 공교육의 벽은 너무나 견고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그들의 어버이들은 계속적으로 항지로 이주하고 철암고등학교는 폐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철암에 대한 모든 정책은 폐광을 명분으로 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광부들이나 그들의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하며, 결과적으로 그들을 모두 새로운 사람들로 대체하더라도 황지지역의 상공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하는, 총량적인 경제가 있을 뿐이다. 서울과 지방간의 계 문제가 지방과 소지역사이에서 많은골로 반복되어 좌동하고 있는 것이다.

4. 결: 소지역의 하드웨어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의 중요성

서울의 현혹보존을 위한 정책들이나 경제전 복원과, 지방 대도시들이 보이고 있는 '문화도시'에의 관심과 노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대도시의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는 자본주의의 역동성과 점점 진전되고 있는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나름의 방향을 설정하여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의 중소도시들도 서울과, 광역시로 대표되는 대도시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간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는, 소지역 문제에 대한 접근이 지금까지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이름의 물적 인프라의 계량적 접근이나 경제적 생산에만 치우쳐 결과적으로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국가비용의 투입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건축과 도시라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도 단순히 건축과 도시환경의 난맥상을 바로잡는 측면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주어진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물체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사회적 요구가 너무나 복합적이며, 건축이 물체형태로서 믿을 끈립할 수 없을 만큼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며, 어떠한 도시와 건축도 미학적 자율성이나 계량적 공학이나 경제학만의 힘으로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와 건축은 우선 것들과 함께 그 사회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동인들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가장 평범한 사실을 철암은 폐허로서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는 건축가에게 건축과 도시를 건조환경과 자연환경을 포함한 문화전반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건축가들의 공공적업은 모더니스트들의 그것처럼 로맨틱한 엘리트주의에 갇혀서는 안 되며 현장에 굳게 발을 딛고 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축가의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건축가들의 회생과 참여를 통해 선례를 만들어 가고 그 경험을 나누는 노력이 요구된다.

<부록> 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 활동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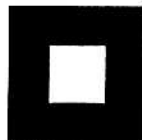
연 도	주요 활동	비고
1999.11	-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 창립	
2000. 7. 26~29	-철암지역도시현황 및 산업문화유산 조사	연인원 143명 참여
2001. 2. 28	- '철암 그 미래를 위한 제안 1차 전시회'	
6	-광산지역 산업문화유산 보존운동 전개	강원산업 건물 3동 결기
7	-철암역전단지 조영효과시연	KBS와 공동
9. 1	- '철암 그 미래를 위한 제안 2차 전시회'	
12.19	-KBS 환경스페셜에 방영	
2002. 2	-철암역갤러리 설치지원	
5	-철암역 선단장 등록문화재 등록	문화재 등록 21호
3~7	-철암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나는 건축교실' 운영	8회 32교시
7.30~31	-제1회 철암골페스티벌 개최 지원(주관단체)	

7.10-8.17	-결암지역특검노인 집짓기 자원봉사프로그램(연인원 712명 참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의와 공동, 5동
9. 1	-대중 무사도 결암지역 대규모 수해발생	
9. 1-30	-수해조사 및 수해조사보고서 발행	
9-12	-결암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나는 권죽교살' 운영	5회 20교시
10-12	-결암지역 수제민 집수리 지원	봉산지역사회연구 소와 공동 주관
2003. 1-4	-결암어린이도서관 개관준비지원	
2-4	-결암영화스크린대학생디자인공모전 개최	
3-7	-결암초등학교 교육지원 '신나는 권죽교살', '신나는 사진교살'	7회 28교시(8-12학년 교육모임), 6회 24교시(사진필 단 사진문), 3회 32교시, k-12 교육 교육모임
4. 4	-서울 성북초등학교 '신나는 권죽교살' 운영	
4. 4	{결암세상}출간(각입팀 연구결과보고서 및 활동지침서)	
6-7	-결암어린이 도서관 개관	
6-7	-결암영화스크린대 설치공사(해백시 지원)	
7.10-8.7	-결암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집짓기 자원봉사 프로그램	2동, 연인원 1,000 명 참여
7.25-26	-제2회 결암예술축제 개최	문예진흥기금 후 원, 결암예술축제 위원회와 공동
9.13	-대중 메모로 결암지역 대규모 수해발생	
9-11	-결암초등학교 교육지원 '신나는 권죽교살', '신나는 사진교살'	7회 28교시(8-12학년 교육모임), 7회 28교시(사진필 단 사진문)
10	-결암주민 수해대책위원의 결성활동 및 해 백시 결암수해 대의 발표	
12	-강원도 "탄양지역 생활문화 복원사업" 실 시계획 발표 및 예산배정	-결암로 및 결암천 확장 -임대아파트 300세 대 건설 -결암시장 재건축

집은 무엇으로 짓는가 (홍천기)

「인물과 사상 24호」

부유한 복지사회의 수많은 틈새들



1988년 6월 독일로 공부하러 떠났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었던 일은 유학에 들어갈 돈도 돈이었지만 잘사는 나라에서 사는 데 혹시 눈치 받는 일이나 없을까 하는 불안함이었다. 무엇보다 당장 들어갈 방은 어떻게 구하고 방값은 무척이나 비싸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프랑크푸르트공항에 내려 기차를 타고 어학 훈련을 받는 곳으로 지정된 프라이부르크역에 내릴 때까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역에서 대합실을 나오다가 제일 처음 눈에 띈 광경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걸인이었다. 흰 줄에 들어선 나이에 후줄그레한 중절모를 쓰고 짙은 검고동색 양복을 걸친 그 양반에게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지만, 그를 보고 동정심보다는 나의 처지에 대한 안도감부터 들었다. 아니,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들 속에 낀다는 독일에도 거지가, 그것도 저렇게 창창하게 일할 기력이 있는 연배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니! 하지만 몇 달 뒤 당시 아직도 분단 상태에 있던 서베를린에 정착하기 위해 갔을 때, 사람들이 붐비는 베를린 중앙역 구실을 하는 동물원역 주변이나 길거리에서 좀 추레했지만 멀쩡한 차림을 한 적지 않은 수의 거지들을 목격하는 일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잘사는 나라에 대한 의문은 독일 사회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도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독일 전역에 걸쳐 약 6만의 집 없는 사람들, 즉 노숙자가 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개신교 계통의 독일 복음교회(EKD)가 운영하는 '디아코니'나 가톨릭의 '카리타스'를 비롯한 각종 공·사설 복지시설 또는 자선기관에 수용되거나 본인들이 적극적인 의사만 표시하면 취업까지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사회적 기회의 선

택을 거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의문은 더욱 깊어졌다.

독일 사회에 대한 나의 생각이 갈피를 못 잡고 더욱 꼬인 것은 1988~89년 겨울 학기 내내 서베를린 대학가를 휩쓸어 결국 전학기 휴강 사태를 몰고 왔던 '대학교 농성(Uni-Besetzung) 운동'을 겪고 나서였다. 이 사태의 직접적인 계기는 당시 서베를린 주의 집권당으로 선출된 보수 기독교민주연맹(기민련: CDU) 정부가 1968년 학생혁명 당시 학생들의 요구로 제3세계권의 이해와 연대를 대학교육 차원에서 도모한다는 취지로 설립했던 '라틴아메리카 연구소'를 폐쇄하고, 사회과학부와 통합되어 있던 보다 진보적 성향의 철학과와 역사학과 등을 약간은 보수적 색채가 짙은 신학과와 같은 계열로 만드는 문화과학부에 귀속시킨다는 대학교 구조조정 정책을 공포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소위 '68혁명'의 성과물이 무화된다는 이유로 결사반대를 천명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대표들을 철수시키면서 대학의 모든 공식 수업을 거부하고 나섰다. 사태는 대학교수들이 학생들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나서면서 베를린 주장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항의 운동으로 비화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 이래 서베를린 대학가에서 처음 벌어진 이 항의 운동의 근본적 원인은 직접적으로 제기된 대학정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존과 관련된 더 깊은 문제에 있었다. 당시 학생들이 가장 격렬하게 요구한 것은 학생들의 주거권이었다. 독일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부모로부터 독립할 권리가 있는데, 이때 본인이 거주지를 요구할 경우 부모로부터 일정한 임대료를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주정부는 이 자녀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을 제공할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그에게 학생 기숙사의 방을 제공할 책임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대학복지국이 지게 된다.

문제는 베를린 시내에서 학생복지국이 보유하는 기숙사 방들이 모두 바닥아서 타지에서 온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주립 체육관이나 아니면 폐선 조치된 여객선의 선실에 임시 숙소를 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과 1년 뒤의 동서독 통일을 꿈도 꾸지 못했던 당시 시점에서 서베를린의 주택 사정을 악화시킨 또 하나의 요인이 있었다.

서독은 1982년부터 동유럽 거주 독일 교포들의 귀환이주정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2차대전 이후 왕년의 독일 영토였던 동유럽 지역(독일에서 상당수 보수층 시민들은 이 동유럽 지역을 '동부 독일'이라고 불렀었다)에서 대부분의 독일계 주민들이 철수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의 독일 교포들이 현지 국적을 가진 채 잔류하는 처지였다. 그런데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적어도 유럽 차원에서는 동서 냉전을 대폭 완화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 분위기를 십분 활용한 역대 서독 정권들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항상적인 외환 결핍에 시달리던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에 거의 퍼주다시피 한 대규모 차관이나 원조를 대가로 그 지역에 잔류했던 독일계 주민들의 본국이주정책을 연방 소속주 전체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했다. 조부모까지 독일 국적이었던 것만 입증되면 유럽 최선진국 서독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여 서독 본토로 이주할 길이 열린 동유럽 거주 독일 교포들의 이주 신청은 해가 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다. 서베를린은 이런 이주자들(Übersiedler)의 중간 기착지였는데, 서베를린 주정부는 이들이 원하는 연방 각 주로 분산 이주할 때까지 숙식을 책임지고 있었다. 주정부가 권장하는 공공주택들이 이들의 뒷바라지에 소진되자 외국으로부터 온 망명 신청자들에게나 제공하던 컨테이너까지 이들의 거처로 동원되는 형편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학생들에게 기숙사로 줄 건물이 남아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건물에서 남아 있는 주거공간이 있

었다. 그것은 장애인 학생용이었다. 아무리 주거 사정이 급박해도 기숙사 방이나 아파트가 비면 장애인 학생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제공되었다.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독일 대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학생들이 눈독을 들이는 건물이 두 종류 있었다. 그것은 휴강 상태로 더 이상 수업이 진행되지 않고 학생들의 농성장으로 사용되는 학교 건물, 그리고 학교 주변의 빈집들이었다.

베를린 자유대학 본관 건물에서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인 달램도르프역 가까이에선 항상 비어 있는 조그만 집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 앞을 지나는데 조그만 정원이 딸린 이 귀여운 모양새의 집 창문에 푸른색 페인트로 흉측하게 갈겨쓴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점거되었음 (Besetzt!!!)"이라고 쓰여진 창문의 그 홀림체 글씨들은 아무래도 그 집의 모양새와 어울리지 않았고, 그 집 안에는 도저히 집주인이라고 볼 수 없는 남녀 학생 몇 명이 둘러앉아 아주 태연하게 담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일본 사람이 사놓고 휴가 때나 들른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점거 표시는 이듬해까지 내내 지워지지 않았고, 학생차림의 남녀들이 드나드는 모습도 가끔 눈에 띄었다. 자기 집이 점거당한 것을 알고도 집주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생들의 사정을 양해했다는 꿈같은 얘기만 독일 친구들에게 들을 수 있었다.

빈집 점거'의 권리?

하지만 이것은 '빈집 점거'에 대한 나의 이해에 있어 아주 하찮은 출발점에 지나지 않았다.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되고 그에 따라 미·영·불 연합국의 점령군 사령관 관할 아래 있던 서베를린이 통일독일 정부에 반환되면서 동서베를린도 자동적으로 2차대전 이전 모습대로

통일되었다. 문제는 동·서 베를린을 가르던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면서, 베를린 장벽 건설 당시 동독 당국에 의해 거주자가 전연 소거(疎開)된 동베를린 측 장벽에 접해 있던 건물들이 대량으로 빈집 상태에 들어간 데서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주택 부족으로 전전긍긍하던 서베를린 쪽의 좌파 단체 소속 대원들과 펑크족, 동독의 청년 실업자들이 어울려 1991년 가을부터 이 빈집들을 조직적으로 점거하고 아예 전기와 수도를 끌어들이어 살림을 차리고 나선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기 직전 서베를린 시장이 된 사회민주당의 발터 몸퍼는 이 건물의 개축 작업에 들어가려는 소유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해를 넘긴 1992년 1월 관련된 건물들의 점거자들을 축출하는 경찰 작전을 명령했다. 대부분 건물들의 점거자들이 경찰에 의해 소거되었지만 자율주의자들(아우토노메 그룹)과 급진 성향의 실업자, 그리고 빈집 점거 운동가들 등 185명이 점거한 가장 큰 건물은 밀려드는 경찰에 맞서 가제 집기로 바리케이드를 쌓고 완강하게 저항했다. 아래층을 점령하면 그 저항선을 위층으로 옮기고 좁은 계단들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맞서는 이들을 베를린 경찰력만으로 끌어내기 힘들다고 판단한 몸퍼 시장은 같은 사회당이 집권하는 4개 주의 내무장관들에게 총 3천 명의 기동경찰을 빌려왔다. 베를린 장벽 지역이 최루탄 가스와 물대포의 물보라로 뽀얗게 흐려지는 가운데 소거 작전은 하루 내내 계속되었다.

그런데 시민들의 비난은 불법 점거자들이 아니라 탁월한 경찰 동원력을 발휘한 몸퍼 시장에게 집중되었다. 베를린 시의 주택 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악화일로로 걸어왔으며, 집 없는 사람들의 거주권 요구가 사회민주당에 의해서도 속 시원하게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주택자들의 사정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사태를 진압한 시장의 처사는 "행정적 무능력"과 "정치적 대화 능력 부족"으로 비판받았다. 그해 있었던 주 선거

에서 몸피는 결국 폭력을 지시한 시장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낙선의 고배를 마셨으며, 당내에서의 지위도 다른 동료에게 넘겨주는 등 정치인 생활을 마감해야 했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위생적인 자선기관이나 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수용 공간은 마다하면서 빈집은 불법적으로 짐거하고 들어가는 독일 대학생들이나 실업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나에게 의문이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심정적으로 옹호하는 독일 시민의 여론 향배도 이제 막 민주화 초기 국면에 들어간 나라에서 온 나로서 더욱 이해하기 힘들었다.

1995년 봄 7년간의 유학생생활을 끝내고 귀국을 서두르던 나는 참으로 뒤늦게 빈집 짐거 운동의 원조격인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에 대한 얘기를 언론에서 접했다. 마침 걸프전 뒤끝이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탄압 정책에 대한 논란이 시끄럽던 때였다. 이스라엘 정부를 비난하는 피에르 신부의 발언 중에 반유대주의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독일 언론들이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독일에서 정치가나 사회적 명망가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금기가 있다.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여성을 비하하는 인동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이스라엘 국가와 정부가 아무리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유감 표명 수준 이상의 비난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점에 관해서는 가벼운 농담도 절대 금기인데, 이 사정은 프랑스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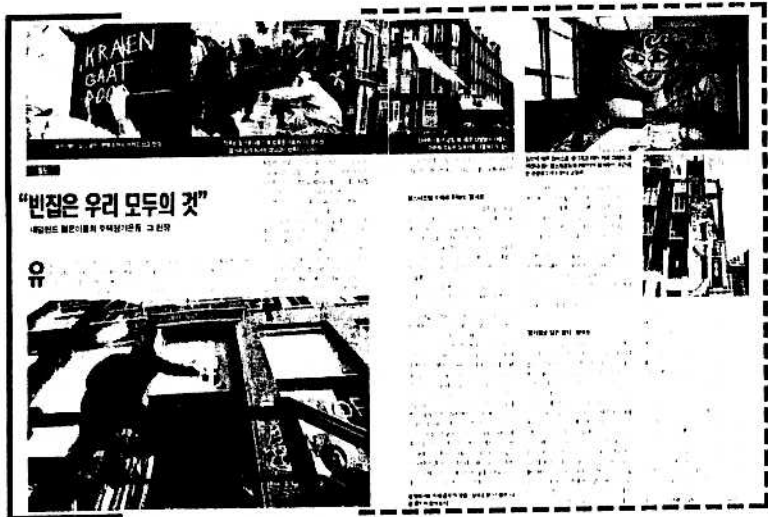
그런데 피에르 신부라는 사람이 누구인데 그가 이스라엘 정부의 폭력적인 정책을 반유대주의적 이조로 비판했다고 해서 그렇게 독일과 프랑스 양국 언론이 격앙해야 할까? 나는 유럽에서 일어나는 빈집 짐거 운동의 정신적(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교적) 근거와 행동 방식을 제시

하고 2차대전 직후부터 거의 반세기 동안 몸소 실천에 옮김으로써 프랑스인들 사이에 큰 신망을 얻었다는 그의 존재를 이때 처음으로 알았다. 그때 단편적으로 들은 그의 발언과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는 비로소 유럽의 빈집 짐거 운동이 문명사적으로 만만치 않은 의의를 기렸다는 것을 분명히 짐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이 아흔을 바라보는 피에르 신부에게 "프랑스인들이 프랑스의 정신으로 추앙하면서 국가적으로 가장 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권운동가"라는 칭송이 마치 작위 명칭처럼 늘상 따라붙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빈집 짐거 운동은 분명히 누군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을 쫓아내고 그 주인 대신 집을 차지하고 들어가 살자는 운동이 아니다. 빈집 짐거 운동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네덜란드의 '크라키'나 독일의 '베셋치', 프랑스의 '엠마우스 공동체' 모두가 마찬가지이다. 민법적으로나 공법상으로 명백하게 '소유자'가 있으나 당장의 '거주자'는 없는 집과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자체의 한계선을 분명히 지킨다.

그리고 빈집 짐거 운동은 어떤 형태로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더 많은 집을 가지기 위해 벌이는 운동도 아니다. 그 운동의 주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나 눈을 막아줄 지붕 그 자체가 달린 집이 없이 길거리에서 마치 원시상태의 인간처럼 하늘을 보고 잠을 청해야 할 처지의 사람들이나 그 처지에 연대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소유하는 것이 아니라—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빈집 짐거 운동에서 무엇보다 핵심적인 것은 집을 가지는 것이 자신의 삶에 결정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나 생각하게 된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주거공간이 배풀이지게끔 도와준다는 것이다. 빈집 짐거 운동은 무주택자에게 집을 무상으로 분양하거나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빈집 점거 운동은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자위적인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이 의미있게 실현될 수 있는 문명적 공간의 확보를 지향한다. (한겨레21, 1995년 4월 27일자)

써 새로운 주택 '소유자들'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는 국가주도적인 주택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발상에서 성립한다. 즉, 피에르 신부가 그 사상적 원조가 되고 유럽 각국의 행동적 실천가들이 실행에 옮기는 빈집 점거 운동 및 그와 결부된 무주택자 주택 확보 사업(빈집을 점거하는 것과 달리 빈땅에 집을 지어주는 사업)은 '집'을 통해 실현할 '인간적 삶의 의미'가 분명하게 자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전제한다. 따라서 그 운동과 사업의 결과는 타인의 요구에 대해 배타적으로 작용하게 마련인 주택에 대한 법적·경제적 소유권과 사용권이 아니라 자기와 타인을 포함한 인간 전체의 삶에 대한 사랑과 의미의 각성, 그리고 그에 따라 다시 살 만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 자기 삶의 지속적 활성화이다. 궁극적으로 빈집 점거 운동은 빈집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의 획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립적인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문명적 공간의, 타인

과의 공유를 지향한다.

바로 이집 때문에 버젓이 자기 부모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빈집을 찾아 점거하는 데 합류하는 유럽의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네덜란드에서 크라키의 대열에 합류한 아인트호벤 출신의 한 젊은 여성은 빈집 점거에 참여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까지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생활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무언가 다른 생활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자발적으로 생겨나 개별 집단별로 분산적으로 영위되는 이런 크라키들의 생활이 쉬울 리는 없다. 서방 세계의 자유로운 삶을 동경한 동유럽 젊은이들이 이런 크라키 집단을 찾아와서는 생계의 대책이 없어 길거리를 방황하는 사례는 허다하게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의 모델을 제시한 피에르 신부의 엠마우스 공동체는 그의 성직자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조직생활 경험과 오랜 운동 실천을 통해 이런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양상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 '배제된 자들'을 제도적 구조 안에 체계적으로 다시 내포시킴으로써 문명적 차원에서 영성의 부흥을 기한다는 집에서 여전히 특이한 성격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해 '피에르 신부 재단' (FAP: Fondation Abbé Piene)이라는 구심점을 갖추고 '엠마우스 인터네셔널'이라는 국제적 조직회를 꾸준히 실현해 2001년 현재 한국을 포함해 44개 국에 걸쳐 350여 개의 단체를 구성한 엠마우스 운동은 국제적인 공동체를 지향하여 정상적인 삶에서 '배제된 자들'을 다시 문명생활 안에 내포시킴으로써 현대 문명 그 자체의 근본적인 치유를 기도한다. 이 공동체의 이런 지향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적 물신 숭배 속에서 대다수가 망각하고 있는 '집'에 대한 문명사적 의미—반드시 기독교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종교적 형태로 환기시켜 삶에 대한 새로운

에토스를 제시하기 때문에 큰 공감과 감동을 받는다. 피에르 신부의 매시지에 따라 나는 '집'의 문명적 의미를 조금은 동양적인 성격의 어원학적 단서에 따라 재구성해 보았다.

인간은 '노숙자'로 역사를 시작했다

인간의 모든 문명은 '돌(居) 머물(住) 집'을 짓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문명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상한선은 구석기 시대이다. 다시 말해 구석기 '문명'이야말로 인류가 가지게 된 최초의 문명 형태이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시대부터 인간은 손이나 발, 또는 이빨 등과 같이 당장 마음먹은 대로 휘저을 수 있는 신체 부속기관 이외에 돌맹이, 동물의 뼈나 치아, 또는 극히 일부이지만 나무토막 같은 외부의 딱딱한 물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물체 가운데서도 돌맹이가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은 이를 손에 넣고자 했을 때 저항받는 일이나 신경 쓰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동물의 뼈나 이빨을 쓰자면 동물을 잡아야 했고, 식물을 쓰려면 적당한 것을 찾아 헤매야 했지만, 돌은 굴러다니는 것을 그냥 줍기만 하면 되었다(인간 신체의 각 부위나 그 전체 크기를 넘어서는 크기의 큰 돌이 필요하게 된 것은 구석기 문명이 출발하고 나서도 한참 뒤의 일이다).

돌로 제일 먼저 한 일은 당연히 먹을 것을 마련하는 것이다. 동물을 사냥하던 식물을 채취하여 가공하던 돌의 용도는 다양했을 것이다. 인간은 먹을 것을 직접 입(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둥이'겠지)으로 먹지 않고 반드시 손을 먼저 거쳐 입에 넣는다. 이는 인간의 전반적 기능이 다른 동물보다 더 다양하게 발전했다는 증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

을 때 손을 사용한다는 것이 '충분히 인간적인' 특성은 아니다.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영장류도 대부분 입이 아니라 손을 사용하여 음식을 입에 넣는다. 영장류와 인간이 정확하게 갈라지는 분기점은 돌에서부터 시작되는 도구의 사용 여부이다. 돌맹이로 먹을 것을 마련하고 가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영장류와 구별되는 '충분히 인간다운' 특징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돌맹이는 '인간적' 생존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것은 '손'이라는 신체 부위를 통해 인간 신체 밖의 자연에 '통제'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가하게 되는 아주 조그만, 그러나 일단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의 원천을 이룬다.

여러 가지 고고인류학적 증거나 각종 신화적 담론에 담긴 인류의 원초적 기억들로 미루어볼 때 인간의 역사에서 돌의 사용은 불의 제어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돌의 사용과 더불어 이루어진 구석기 시대의 각종 인간적 성취물들을 구석기 '문명'이라는 범주로 묶게 해주는 결정적 사태는 인간이 돌의 사용과 거의 동시에 '돌(居) 머물(住)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생겨났을 때 들어갈 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도리는 없다. 분명히 인간은 노숙자로 역사를 시작했다.

문명이라는 것이 유지된 기간을 한껏 늘어 잡아 1만 년 정도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이 지난 끝점에 위치한 지금 우리가 으레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조물 가운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부분은 벽이나 기둥이나 방이 아니라 아마도 '지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원시시대 인간들의 원초적 상징의식이 흔적으로 남아 있는 한자어에 대한 나름대로의 변통에 있다.

원시인이 처음 들어가 머물렀던 곳은 지금과 같은 '가(家)'나 '옥(屋)'이 아니라 '동굴'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동굴을 뜻하는 한자어 '천(穴)

은, 현재로서는 움집을 가리키지만 본래는 지붕 모양을 본뜬 '면(定)' 자 밑에 바로 사람들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양을 본뜬 사람 '인(人)' 자를 안은 형상이다. 다시 말해 동굴은 사람들이 들어가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지붕을 제공하는 곳이다. 그리고 동굴은 별다른 가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기능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었으면서도 자연 안에서 저절로 찾아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다. 이런 자연 구조물에서 인간이 기대했던 첫번째 기능이 지붕으로서의 역할이다. 이것은 많은 단어에서 원초적 일상 경험의 표상이 흔적처럼 상당수 남아 있는 독일어에서도 확인된다. 독일어에서 집 없는 사람(들), 또는 노숙자들을 뜻하는 단어로써 영어의 '홈리스(homeless)'에 해당하는 '옵다하로서(Obdachlose(r))' 라는 말은 사람의 머리 '위(oben)'를 덮어줄 '지붕(dach)'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사람이 자연 안에 살면서도 지붕을 찾았다는 것은 자연 안에 살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해 다른 자연과 구별되는 또다른 기능을 기대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런 기능이 자연 안에서 찾아지는 다른 생물류와 처음부터 확연하게 분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엇인가 덮을 것을 찾아 동굴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자연구조물을 찾아 헤맸던 원시인들의 의식은 '둥지'를 만드는 새들의 본능과 크게 차이나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穴)은 인간이 이제 또렷한 목적의식 아래 인위적으로 집(家)을 짓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경험들을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하게 만들었음에 틀림없다. 집은 단지 지붕(穴) 아래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근근이 목숨줄을 이어가는 차원을 넘어 '사람과는 다른' 돼지(豕) 같은 것들을 같은 지붕 아래 둘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家)'이 된다. 기묘하게도 한자이

형성에서 동굴 '혈(穴)' 자는 지붕 면(穴) 방이나 사람 인(人) 변화는 확연히 구별되는 독립된 부수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 부수가 붙어 만들어진 한자들은 대체로 무엇인가 깊이 있게 집중하여 그 궁극점까지 다다른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골똥히 생각하여 알아낸다는 뜻의 究(究), 다하여 빌 정도까지 된다는 空(空), 미세하게 파고든다는 뜻의 穿(穿), 흰히 내다본다는 窓(窓), 끝까지 간다는 窮(窮), 비밀을 엿본다는 뜻의 窺(窺), 남모르게 자기가 할 짓을 한다는 뜻에서 나온 竊(竊) 등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동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인간이 동굴에 만족하지 않고 집을 짓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

당연히 동굴 안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 할 짓과 똑같은 짓을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생명을 이어갔다. 최초의 지붕으로서 동굴이 한 첫번째 일은 당시의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힘을 갖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한 더위나 추위, 비나 바람이나 눈, 나아가 야수 등과 같은 자연의 압도적 위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굴은 인간으로 하여금 남성과 여성간의 '성적 결합'을 피하게 만들어 자손을 '생식'시키고, 그 자손을 자연 재해나 다른 동물의 야수성으로부터 은폐시켜 안전하게 '양육'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땅굴을 파는 두더지나 둥지를 트는 새들에게도 허용된 이런 일들이 동굴을 통해 인간에게도 배풀어지면서 인간에게는 이런 자연류들과 전혀 다른 일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것은 주로 이 단계까지 살아남는 데 성공한 인간종이 당시까지 진행된 뇌의 진화 과정을 통해 다른 자연류들과 전혀 달리 획득하기에 이른 특이한 성질, 즉 '의식'이라는 정신작용을 통해 일어났다.

의식은, 특정 대상을 다른 어느 것이 아닌 바로 그 대상으로 표상하고, 그렇게 표상된 대상을 표상하는 바로 그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 기억시켜주는 정신작용이다. 그 기제가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20세기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된 고고학적 신경생리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순한 동물적 지각이 아니라 의식을 동반한 인간의 지각작용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동물과 공유하는 본능을 넘어선 차원에서 대상 세계와 인간 자신의 실존을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현재로서는 없는 것을 새로이 기획하는 일, 즉 창조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식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코드는 '같은 것'과 '다른 것', 또는 '같음'과 '다름'을 통해 대상을 분별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의식은 '같은 것은 같다'라고 하면서 그때 '같은 것'을 적시하고, '다른 것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때 '다른 것'을 구별해낸다.

동굴은 인간에게 자연의 위력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안에서 생식을 하면서 자신의 후손을 경험할 환경을 길고 단단하게 허용함으로써 인간이 이러한 자신의 의식 능력을 훈련시킬 안정된 시간을 갖게 만들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때 같음과 다름을 번갈아 다방면으로 교차시켜 적용해 봄으로써 이런 같음과 다름의 기본 범주들을 자유로이 구사하여 판단을 행하는 구심점으로 인간 자신에 대한 의식이 솟아올랐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인간이 동굴 안에 살면서 다른 동물과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자기의식'을 갖고 행해졌다. 따라서 진화론적으로 볼 때 동굴 안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태는 인간이 '자기'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굴이 인간에게 아무리 동물과 구별되지 않는 기능을 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물적인 일들은 모두 인간이 자기의식을 갖고 한 행위로 수행되었다. 즉, 이제 인간은 동굴을 이용하여 '자기'의 힘을 압도하는 자연의 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면서, '이제 자기와 더불어 하는 다른 자기'와 안전한 성교를 행하여 그에 따른 번식의 결과 생겨난 '또다른 자기'인 새끼를 부양하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인간 자신

은 '자기'를 통하여 '자기와 다른 것'과 결합함으로써 '또다른 자기'를 만들어 '자기'를 끊임없이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자기의식'의 원초적 형태를 '자각'하기에 이른다.

동굴에서의 삶은 당연히 집짓고 사는 삶의 원형이다. 따라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그 어떤 특색을 가진 '문명'이라는 것을 찾으려면 당연히 집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가며 살았던 어느 정도 규모의 삶의 흔적, 주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인간적 생존의 가장 원초적 형태인 돌맹이의 사용이 이루어진 곳에서 문명의 단초를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배제당한 사람들의 상처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인간의 의식을 어떤 의미에서든 동굴과 비유한 것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분명히 인간은 동굴 안에서 오랜 기간 의식을 사용하는 훈련을 수행했으며, 인간 의식에 대한 가장 원초적 표상은 동굴과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식별해가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령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無明)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 속에서 헤매는 인간 의식을 어둠과 비교할 때, 그 어둠은 아직 인간 의식이 동굴 속에서 움직였어야 했던 원시 시대의 인간 조건에 대한 기억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인간이 이런 동굴 속에 머물러야 하는 한 그것은 오직 밤에 활동해야만 다른 야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그 지극지극한 기억과 겹치는 일이기도 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인간이 바로 인간으로서 이런 동굴 속에서의 나약한 삶에서 벗어나 어둠이 아니라 이제 밝음 속에서도 안전하게 자기를

보호하면서 동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인간 삶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집(家)은 무엇보다 동굴 속에서 인간들끼리 웅성거리면서 사는 상태를 벗어나 전에는 자기와 직접적 연관이 없었던 돼지(豕) 같은 것들, 즉 자기와 전혀 다른 것도 같은 지붕(定) 아래 둘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자신감이나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는 당연히 동굴(穴) 안에서 궁리를 거듭한(窮) 결과 훈련된 자기의식에서 창출된다. 따라서 집은 이렇게 발전된 인간으로서 자기의식을 통해 자신감을 유지하고 삶을 실현하는 필수적 전이이자 그 다음의 발전을 기할 수 있게 만드는 매체이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는 반드시 인간다운 인간 자신과 그의 인간다운 삶이 자기의 삶으로 나와야 한다. 즉 집은 인간이 자기로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어떤 문명이든 그것을 추구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을 확보하려면 그런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집부터 짓는 것이 순서였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집'은 문명이 필요로 하는 인간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필요했고, 그런 인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했으며, 그런 인간들의 발전을 통해 문명 자체의 수준을 높이고 그 내용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어떤 문명이 생겨나도 제일 먼저 신이 살 사원을 짓고, 권력자가 다스릴 왕궁을 건축했으며, 그런 문명의 인적·물적 자원을 생산할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거주할 집을 지었다. 그리고 이 모든 건축물들과 집들과 같은 생활 시설물들과 인간들(口)을 성(口)으로 둘러싸 창칼(戈)로 보호함으로써 국가(國)가 성립했다. 인류 역사에 명멸한 각양각색의 국가들이야말로 인류가 거둔 가장 찬란한 문명적 성과인데, 이 국가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은 그 도성을 부수고 나서 반드시 그 집들을 파괴하고 방화하여 존립의 흔적을 없앴다. 집의 소멸은 그 집에서 길러진 인간들의 현실적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곧 한 문명의 종말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

피에르 신부는 이런 문명 소멸의 과정을 거꾸로 밟음으로써 문명 재생의 구도를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문명이 줄 수 있는 인간적 가능성에서 완전히 배제당한 사람들 셋을 모음으로써 '문명 없는 상태'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들은 자기 집에서 외면당하거나 도피했거나 아니면 집이 아예 없어 모두 집을 갖지 않고 길거리나 외지를 방황해야 했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공통점을 가졌다.

배제당한 사람 1: 살인자 조르주

전쟁이 끝나고 피에르 신부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는 살인자 조르주와의 그 유명한 만남을 겪게 된다. 조르주가 살인한 대상이 바로 친아버지라는 점에서 조르주는 법적으로나 인륜적으로 완전히 배제당해 마땅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

시중들던 노인이 죽자 우연하게 떨어진 엄청난 재산으로 뜻밖에 부자가 된 가정부 출신의 어머니와 그 재산을 탐내 애정도 없이 정략결혼을 한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조르주는 스무 살에 약혼한 여자가 있었다. 아버지를 죽도록 증오했던 어머니가 죽고 난 후 아버지가 새로 사귀는 여자는 조르주에게 가는 재산을 탐내 조르주 몰래 그의 약혼녀에게 익명으로 끔찍한 편지를 써서 조르주와의 결혼을 단념시키고 자기의 친척을 조르주와 결혼시켰다. 대를 이은 이 기구한 형태의 결혼에서 조르주는 딸을 하나 얻는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조르주의 친구들이 조르주의 첫 여인과 얘기를 나누던 중 그 익명의 편지들을 보고 그 글씨체의 주인이 아버지의 새 여인임을 알게 되었다. 분격한 친구들이 조르주에게 달려와 편지들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애인의 필체를 알아본 조르주는 제대로 다를 줄도 모르는 자동권총을 쏘아 여자에게 부상을 입혔는데, 말리려 달

려운 아버지에게도 총을 쏘아버렸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
 사했다. 감옥에 수형 생활을 하던 그는 목숨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불
 속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한 공으로 사면을 받아 예고 없이 집으로 돌아
 왔다. 그런데 아내는 자기보다 몇 달 먼저 출감하여 그의 소식을 전하러
 갔던 감방 동료와 동거하고 있었다. 게다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
 가 첫 여인에 대한 애정의 포로가 되어 살인을 저지른 낭만적인 사람인
 줄로 알고 미화된 감정을 갖고 있던 딸도 수감 생활로 일그러진 아버지
 의 추한 모습을 보고 실망 정도가 아니라 극도의 혐오감을 보이며 말하
 는 것조차 꺼렸다. 조르주는 자살을 기도했고, 이를 우연히 목격한 사람
 이 조르주를 피에르 신부에게 데려왔다.

배제당한 사람 2: 남편이 둘이고 아내가 하나인 가족

문제의 가족은 한 부인이 세 아이와 한 할아버지와 두 남편과 함께 사
 는 기묘한 구성을 갖고 있었다. 그 부인의 첫번째 법적 남편은 2차대전
 내내 독일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전쟁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다
 른 남자와 살고 있었다. 본래 이 법적 남편과의 사이에 한 아이가 있었
 고, 전쟁 기간 동안 동거남과 두 아이를 더 낳았다. 이 법적 남편은 자기
 마음의 갈등과 한참을 싸우다가 아내의 두번째 남자와 합의하여 "아이
 들에게 가장 고통을 덜 주는 방법"으로 한 아내에 두 남편이라는 이 기
 묘한 가족 구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건은 두번째 남편이 낫일을 하
 고 자신이 밤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배제당한 사람 3: 사회적 책임의 중압으로부터 도피한 부유한 엔지니어
 엠마우스 공동체의 첫번째 봉사자였던 어느 부유한 기업가의 아들은
 그 자신 유능한 엔지니어로서 아버지의 기업까지 이어받기로 되어 있는

진도양양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사회적 책임감의 중압을
 견디지 못한다는 성격적 약점이 있었다. 피에르 신부에 봉사한다는 것
 을 핑계로 약혼자와의 결혼을 미루던 그는 장인 될 사람의 압력으로 결
 혼을 해 바로 아이를 가졌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주는
 불안" 때문에 홀연 사라져 외인부대에 지원해버렸다. 그녀의 아내는 망
 설이지 않고 남편의 부대 옆으로 이사 가서 그가 5년의 복무 기간을 마
 칠 때까지 그곳에 정착함으로써 그에게 변함없는 애정을 확신시켰다.

피에르 신부는 1997년에 펴낸 회고록 『한 신앙인의 회상』에서 자신을
 처음 따른 인간들의 이런 사연들을 적으면서 이들을 "상처 입은 독수리
 들"에 비유했다. "인간의 마음이란 그림자와 빛으로 짜여져 영웅적인 행
 동과 지독히도 비겁한 행동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며, 광대한 지평을 갈
 망하지만 끊임없이 안팎의 온갖 장애물에 부딪쳐 그 내면에서 넘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은 분명히 현대 문명에서 혜택은커녕 혼자 힘으로
 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자들로서 타인의 음모에 떠밀리거나
 자기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삶에서 배제당하는 궁지에 몰렸다. 재산에
 대한 탐욕,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전쟁, 그리고 사회생활이
 주는 스트레스는 이들이 과거의 생활을 지속하는 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장애물을 형성한다. 한마디로 이들은 "삶에서 깨지고 부서진 그런
 사람들"이었다. 가정이 파괴된 사람, 감옥에서 나온 사람, 아이들과 함
 께 남편에게 버림받은 부인들, 알코올 중독자들 등등. 피에르 신부에 따
 르면, "이들 상처받은 사람들은 너무도 고통받기에 자기 자신조차 사랑
 하지 못한다."